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2004. 12

정 갑 용 · 주 문 배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정 갑 용 : 제1장~제6장

◆ 연 구 진

- 주 문 배 : 제3장, 제5장, 부록

☐ 산 · 학 · 연 · 정 연구자문위원

◆ 김 현 수 (해군대학교 교수)

머 리 말

육지영토의 바다 쪽으로 연이어 있는 대륙붕은 ‘자원의 보고(寶庫)’라 불리우는데, 대륙붕에는 우리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비롯하여 해양광물자원 및 생물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5일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동해-1 가스전의 준공식이 거행되어 본격적인 천연가스(LNG)의 생산에 돌입하였다. 이 가스전의 가채매장량은 약 500만 톤이며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64년에 처음으로 대륙붕 탐사를 시작한 지 40년 만에 이루어낸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엄밀히 보면 해양관할권의 확보나 그 이용에 있어 지리적 불리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중국과, 동쪽 및 남쪽으로는 일본과 마주보고 있고 그 거리도 가까워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대륙붕을 최대한 확보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질서의 정립을 주관하는 유엔의 해양법당사국회의는 그 산하에 각국의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정하는 임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동 회의는 2001년에 각국이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를 2009년 5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출은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 간에 해양경계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국가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회의 또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의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과 관련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 대륙붕의 너비가 400해리를 초과하고 있고 이들 인접 국가들이 대륙붕 외측한계를 제출한다고 가정할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대륙붕 외측한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준비가 선행된 후에 국가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대륙붕의 탐사, 개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나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목 차

< 요 약 >	i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방법	2
제2장 대륙붕의 개념과 동북아 탐사개발 현황	4
1. 대륙붕제도의 법전화	4
1) 1930년 헤이그법전편찬회의 / 4	
2) 1945년 Truman선언 / 5	
3) 1958년 Geneva 대륙붕협약 / 5	
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6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8
1)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 / 8	
2)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 9	
3)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비교 / 11	
3. 동북아의 대륙붕 탐사개발 현황	13
1) 한국 / 13	
2) 중국 / 17	
3) 일본 / 19	
4) 대만 / 20	
제3장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 및 제출	22
1. 대륙붕한계위원회	22
1) 기능 / 22	

2) 조직 / 22	
3) 기타 / 25	
2. 과학기술 지침	25
1) 목적 / 25	
2) 성립경과 / 26	
3) 주요 내용 / 28	
3. 설정방법	31
1) 설정기준 / 31	
2) 설정방법 / 33	
4. 제출기한 및 절차	41
1) 제출기한 / 41	
2) 제출절차 / 41	
5. 제출사례 및 주요국의 동향	46
1) 제출사례 / 46	
2) 주요국의 동향 / 51	
제4장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56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 제출의무의 법적 구속력	56
1) 제출의무의 근거 / 56	
2) 법적 구속력 여부 / 57	
3) 시사점 / 60	
2. 대륙붕 외측한계와 측정기선의 문제	60
1) 대륙붕 측정기준으로서 기선 / 60	
2) 한·일·중의 기선선포 현황 / 62	
3) 시사점 / 63	
3. 한·중·일 대륙붕의 지질적 특징	64
1) 동해의 지질적 특징 / 64	
2) 서해의 지질적 특징 / 64	
3) 남해의 지질적 특징 / 65	
4) 시사점 / 66	

4. 한·중·일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69
1) 한·중 간 서해의 대륙붕 경계 / 69	
2) 한·중·일 간 동국해의 대륙붕 경계 / 70	
3) 한·일 간 대륙붕공동개발협정 / 70	
4) 시사점 / 71	
제5장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제출에 관한 대응방안	73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준비체제 구축	73
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설치 / 73	
2) 학제 간 연구체제 구축 / 74	
2. ‘대륙붕법’의 제정	75
1) 관련 국내법령 / 75	
2) 일본과 중국의 현황 / 77	
3) ‘대륙붕법’의 제정 / 78	
3. 대륙붕 탐사개발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79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79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81	
3) 석유사업법 / 82	
4. 동북아 해양협력체의 구성·운영	82
1) 필요성 / 82	
2) 추진방안 / 83	
제6장 결 어	85
참고문헌	88
부록 1 : 각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2004년 6월 현재)	91
부록 2 :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유엔해양법당사국회의의 경과	99
부록 3 :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	101
부록 4 :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103
부록 5 :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106

표 목 차

<표 2-1> 주권·관할권·주권적 권리의 차이	11
<표 2-2> 국내 대륙붕의 지역별 탐사현황	14
<표 2-3>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 탐사현황	15
<표 2-4> 중국의 주요 유전별 원유생산 추이	17
<표 3-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회의경과	23
<표 3-2>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	24
<표 3-3> 일본의 대륙붕 문제에 관한 정책방향	51
<표 5-1> 석유개발사업의 용자조건	80
<표 5-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조광료 부과기준	81

그 립 목 차

<그림 2-1> 국내 대륙붕 주요분지 광구탐사현황	16
<그림 2-2> 중국 해양조사선의 조사해역도	19
<그림 3-1> 대륙붕의 외측한계	33
<그림 3-2> 1%의 대륙붕 퇴적물 두께 공식	35
<그림 3-3> 대륙사면단 + 60해리 공식	36
<그림 3-4> 기선에서 350해리 제한 공식	37
<그림 3-5> 2,500미터 등심선 + 100해리 제한 공식	38
<그림 3-6> 대륙붕 한계설정 공식선 도해	39
<그림 3-7> 대륙붕한계자료의 제출절차	42
<그림 3-8> 러시아 극동해의 대륙붕 외측한계	47
<그림 3-9> 러시아 북극해의 대륙붕 외측한계	48
<그림 3-10> 브라질의 대륙붕 한계자료	50
<그림 3-11> 일본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륙붕	52
<그림 3-12> 캐나다 남동부해역의 대륙붕 한계설정(안)	53
<그림 3-13> 뉴질랜드의 대륙붕 외측한계 보고서의 구성	55
<그림 5-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74

<요 약>

제 1 장 서 론

- 대륙붕은 연안국가의 육지영토에 연이은 해저지형으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해양생물공학, 해양레저산업 등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공간임
- 최근, 동중국해의 해저자원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간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국가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질 것임
- 본 연구는 대륙붕의 법개념과 외측한계의 자료제출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기여코자 함

제 2 장 대륙붕의 개념과 동북아 탐사개발 현황

1. 대륙붕제도의 법전화

- 대륙붕은 본래 지질학상의 개념이나, 국제해양법상의 개념은 연안국의 해저지형에 있어서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륙대를 포함하여 대륙변곡까지 확장된 개념임
- 국제법상 대륙붕제도는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왔음
 - 1930년 헤이그법전편찬회의 전후에도 일부 국가들이 권리 주장
 - 1945년 트루만선언 등 연안국들의 관행을 통해 관습법을 형성
 -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최초로 성문화
 - 그 후 여러 국제판례를 통해 이론적으로 발전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법체제를 완성
- 대륙붕의 외측한계
 -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확정함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 대륙붕은 연안국 육지의 자연연장으로 자원탐사,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공간임
- 연안국의 권리는 천연자원의 개발권, 법령제정권, 환경보호권, 인공시설 및 안전수역의 설치에 관한 권리 등임
- 연안국의 의무는 상부수역의 항행자유보장의무,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허용의무, 기여금의 납부의무 등임

3. 동북아의 대륙붕 탐사개발 현황

- 대한민국은 2004년 말 동해 6-1 가스전을 개발하여 천연가스의 상업생산을 개시하였음
- 중국은 1980년대에는 에너지 수출국이었으나 그 후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급속도로 심화하고 있어서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보가 국가경제발전의 성공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주변 대륙붕의 탐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일본도 세계 4위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 수입의 다각화, 석유 및 가스의 개발에 적극적이고 주변 대륙붕의 탐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 대만도 주변 대륙붕의 탐사·개발을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제 3 장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 및 제출

1.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

- 유엔해양법협약의 부속서 II 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회의의 하부기관으로 지리적 대표를 고려하여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리학 분야의 전문가인 21인의 위원으로 구성

- 동 위원회의 역할은 연안국이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사국회의에 권고하는 것과 연안국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할 때 필요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임
- 동 위원회는 총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본질문제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2/3 이상의 찬성, 그 밖의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다수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2. 과학기술 지침

- 동 지침은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가 심사하는 외측한계자료의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 동 지침은 대륙붕의 권원 및 그 외측한계의 획정, 길이 단위, 외측한계의 기준에 대한 수학적 방법, 대륙경사단의 위치 결정 및 방법, 대양저산맥, 해저산맥, 기타 해저고지의 분류와 처리방법, 퇴적층 두께의 결정과 그 오차범위의 추정에 적용되는 지구물리학적 방법, 대륙붕외측한계와 관련된 제출문건에 포함되는 자료 등에 관한 지침임

3. 설정방법

-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라는 기준과 거리기준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산맥은 배제하고 해저산맥과 해저고지는 대륙붕에 속하게 됨

4. 제출기한 및 절차

-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기한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내였으나 2001년 제11차 해양법당사국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출기한을 개정하였음
 - 1999년 5월 13일 이전 협약비준 국가는 1999년 5월 13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이내
 - 1999년 5월 13일 이후 협약비준 국가는 차후 검토

5. 제출사례 및 주요국의 동향

- 러시아
 - 2001년 말에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반려된 바 있음
- 브라질
 - 2004년 5월에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중
- 일본
 - 1983년부터 해상보안청이 대륙붕에 대한 조사를 실시
 - 2009년 5월까지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
- 캐나다
 - 2003년 모나코 외측한계과학회의에서 학술연구결과를 발표
- 호주
 - 2004년 11월까지 대륙붕 외측한계자료 제출의사를 밝힘
- 뉴질랜드
 - ‘대륙붕 프로젝트 고문단’을 구성하여 자료를 정리 중

제 4 장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1.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제출 의무의 법적 구속력

-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는 연안국이 제출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검토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도 사법적 사항을 다룰 수 없음
-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은 대항하거나 인정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육지영토나 해양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음

2. 대륙붕 외측한계와 측정기선의 문제

-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정하기 위하여는 그 측정기준선으로서의 기선이 먼저 설정되어야 함
 - 해양법협약상 기선의 설정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주변국인 일본,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선의 합법성이 문제임
 - 일본은 1996년에 163개의 직선기선을 설정하였는데, 직선기선의 설정이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음
 -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선도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음

3. 한·중·일 대륙붕의 지질학적 특징

- 동해
 - 대륙사면은 제3기 마이오신(Miocene) 이후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한 계단단층에 의해 형성
- 서해
 - 평균수심 55m로, 단절되지 않은 퇴적층으로 구성
- 남해
 - 오키나와 해구로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대륙붕이 분리

4. 한·중·일 대륙붕 경계문제

- 우리나라는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대륙붕의 개발구역으로 7개 해저광구를 지정한 바 있음
 - 제1, 제3, 제4광구는 중국과 마주보는 황해에 있고 제7광구는 한·일·중 3개국이 마주 보는 동중국해에 위치
- 동중국해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이 중첩되고 그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아 해양경계 획정의 대상수역임
 - 대륙붕경계, 배타적경제수역경계선 및 양자의 관계, 오키나와 해구 존재의 경계획정에의 반영여부, 3국 접합지점(Tri-junction)의 도출문제 등임

- 대륙붕의 지형적 요소,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권원,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단일경계로 확정여부 등 검토 필요

제 5 장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제출에 관한 대응방안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준비체제 구축

- ‘대륙붕위원회’의 설치, 운영
 -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화된 추진체 설치 및 운영 필요
- 지속적인 학제 간 연구체제 구축
 - 국제해양법, 해양지리 및 지질학 등 학제 간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관련자료의 수집, 국제동향의 분석, 쟁점 연구

2. ‘대륙붕법’의 제정

- 한국은 1996년 동 8월 8일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 대륙붕에 관한 법 근거가 모호
 - 일본은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제정
 - 중국도 1998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제정
- ‘대륙붕법’을 조속히 제정, 그 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3. 대륙붕 탐사개발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 한국은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대륙붕의 부존자원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하고, 7개의 해저광구를 설치
- 대륙붕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대륙붕의 탐사 및 조사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

4. 동북아 해양협력체의 구성, 운영

- 한국, 일본 및 중국은 가상중간선을 넘어 과학조사를 하는 일이 빈번, 상호 통보로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한·일·중 3개국 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환경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륙붕의 탐사, 개발을 포함하는 거시적 차원의 ‘동북아 해양협력체’를 추진

제 6 장 결 어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륙붕위원회’를 설치
 - 둘째, 국제해양법, 지질학, 해양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 셋째, 대륙붕의 탐사 및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넷째, ‘대륙붕법’의 제정
 - 다섯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석유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정비
 - 여섯째, 대륙붕의 탐사, 개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동북아 해양협력체’의 설치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륙붕이란 용어는 본래 지리학에서 쓰던 것으로 1945년에 미국이 대륙붕과 공해어업에 관한 ‘트루만선언’을 선포한 데 자극을 받아 중남미 국가들이 앞다투어 200해리 혹은 대륙붕선언을 하면서부터 국제법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륙붕은 연안국의 육지영토에 연이은 해저지형으로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기타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생물공학, 해양레저산업 등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공간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 세계 총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특히 석유자원의 경우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요소로 현대 산업발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에서는 북한, 일본, 러시아와 황해에서는 북한 및 중국과, 남해에서는 일본 및 중국과 대륙붕이 중복되거나 마주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에 관련된 국제법적인 연구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최근에 동중국해의 해저자원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데, 2004년 10월 18일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양국 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춘샤오(春曉) 가스전을 채굴하기 위한 플랫폼을 건설한데 이어 중국 쪽으로 9km쯤 들어간 곳에 두 번째 플랫폼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일본 열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서태평양의 광대한 해저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2005년부터 4년간 해저탐사에 1400억 엔(약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이 일대 대륙붕이 ‘일본 소유’라는 점을 유엔으로부터 공인 받아 태평양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 채굴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2004년 10월 15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저영토 넓히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해역 대륙붕 탐사 경비에 한 예산 편성기준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붕 한계 설정에 관한 기초적 조사연구로서 대륙붕에 대한 정의, 법적 지위 및 외측한계 등 대륙붕의 개념을 파악하고, 대륙붕한계위원회 기능 및 구조,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절차, 설정방법 및 최근의 제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방법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문제는 외측한계의 조사 및 자료제출과 관련된 해양지리 및 지리학 등 기술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분야가 있고, 제출의무, 제출기한, 기준선, 경계확정과의 관계 등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법적 측면을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와 주변국에서 추진 중인 대륙붕 탐사 개발과 국가 간의 충돌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범위는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하여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설정방법, 제출절차, 제출사례를 분석하여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 및 제출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유엔 해양법사무국 산하의 대륙붕위원회 및 대륙붕 과학자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출지침, 제출사례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연구의 성격상 문헌조사법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국회도서관의 자료목록을 검색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보완적으로 해양수산부, 산업자

원부, 한국지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의 담당자와 우리나라 주변 대륙붕의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대학교 및 관련 학술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연구내용을 확인·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변국의 관련자료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최근 자료를 보완하였다. 다만, 대만 및 중국의 자료는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로서 사회과학적인 조사연구이며, 자연과학적인 조사는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 장 대륙붕의 개념과 동북아 탐사개발 현황

1. 대륙붕제도의 법전화

대륙붕이란 용어는 원래 지질학상의 개념으로서 영국학자 밀(Hugh Robert Mill)이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해안으로부터 인접육지가 바다로 연장된 부분으로 일정한 깊이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해저지형을 말한다.¹⁾

대륙붕은 원래 지형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국제법상의 대륙붕의 정의는 여러 연안국들의 선언을 통해 관습법을 형성하고 그것을 1958년에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통해 성문화되었다. 그 후 여러 국제판례들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발전되었고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체제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1930년 헤이그법전편찬회의

1930년 헤이그 법전편찬회의 이전에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에 관하여 연안국이 그 인접한 해저를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하게 계속적으로 점유한 경우 그 해저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적 권리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3해리인 영해의 이원(以遠)의 해저는 무주물(無主物 : *res nullius*)이 아닌 공유물(公有物 : *res communis*)이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안국의 실효적 또는 계속적 점유로도 법률상의 권원은 성립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

1930년 헤이그 법전편찬회의를 위하여 해저자원의 관할과 재산권 문제가 회의의 의제로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토의가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1) 지질학적으로 평균 수심이 130m~200m에 이르는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과 급경사를 이루어 1,200m~1,300m에 이르는 대륙사면(大陸斜面; Continental Slope), 이에 이어서 다시 경사가 완만해져 심해저(深海底)로 이어지는 대륙융기(大陸隆起)로 구분된다. 이러한 연안해저의 3가지 구성부분을 대륙변계(大陸邊界; Continental Margine)라고 함.

2) 1945년 Truman선언

대륙붕의 법적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45년 미국의 Truman 선언으로, 1945년 9월 28일 미국의 Truman 대통령이 “미국에 인접한 해저, 해상과 하층토의 천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과 통제에 속한다.”고 선언한 것에서 유래한다. ‘1945년 Truman선언’으로 알려진 이 선언은 대륙붕이 연안국에 속한다는 생각을 명백히 규정한 최초의 주장이며 「대륙붕제도」의 효시(嚆矢)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Truman선언에서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하여 밝힌 바가 없다. 다만, 이 선언에 부수된 미국 정부의 여러 기록에 의하면 대륙붕의 범위를 대체로 연안의 수심 100fathom(600ft 또는 약 200m)까지로 상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3) 1958년 Geneva 대륙붕협약

국제법위원회(ILC)의 연구 및 협의로 초안(草案)이 결정되고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상정되어 신중한 토의를 거쳐 채택된 이 대륙붕 범위에 관한 정의에는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의 기준은 200m의 수심이라는 한계이다. 200m 수심은 지형학적으로 통상적인 대륙붕이 형성되는 수심이다. 사실상 대륙사면(大陸斜面)은 대체로 150m내지 400m의 수심에서 시작되고 있다. 200m의 수심을 제시한 것은 대륙붕 개념에 일반성과 확실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의 기준은 소위 ‘개발가능성’이다. 이것은 장래에 해저개발에 관한 기술이 발전했을 경우에 200m 수심 이원(以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확보해두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셋째의 기준은 연결성(連接性)의 기준이다. 대륙붕인 해저, 해상과 하층토는 ‘연안에 연접한’(adjacent to the coast)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1958년 Geneva 대륙붕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²⁾

2) 동 협약 제1조.

영해 수역의 외측을 해안에 연접한 해저, 해상과 하층토로서 수심 200m에 이르는 지역과, 이러한 수심을 초과하더라도 이 지역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수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그러나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정의된 이와 같은 대륙붕의 범위는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의 ICJ판결에서 ‘육지의 자연연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동 판결에서 ICJ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이루는 대륙붕 지역의 해저(海底), 해상(海床)과 그 하층토(下層土)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육지에 대한 주권의 결과로서, 또 대륙붕의 해저를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행사될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의 확대로서 당연히, 당초부터 (*ipso facto ad initio*) 존재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륙붕의 범위를 육지영토의 자연연장까지로 보는 이 판례는 무엇보다도 종래의 지리적 단일 수심기준(200m)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많은 연안국들이 그들 연안 대륙붕에 대한 자국 관할범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이 ‘육지의 자연연장원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게 되었다.

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연결된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연(外延)까지의 해저(海底), 해상(海床)과 그 하층토(下層土)로 이루어진다.³⁾

3) 동 협약 제76조 제1항 전단.

대륙변계의 외연(外延)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海底), 해상(海床)과 그 하층토(下層土)를 대륙붕으로 한다.⁴⁾ 이 경우,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포함될 대륙변계(大陸邊界)에는 지질학적 대륙붕과 대륙사면(大陸斜面) 및 대륙융기(大陸隆起)를 포함한다. 그러나 해양저(海洋底)와 해양산맥(海洋山脈, oceanic ridges)은 대륙변계(大陸邊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⁵⁾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연(外延)이 200해리 이원(以遠)까지 확장되는 경우에는 대륙변계의 대륙융기가 충적암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외연은 대륙사면의 경사도가 최대로 변경되는 지점을 대륙사면단이라고 하고 충적암의 두께가 이 대륙사면단으로부터의 직선거리의 1%와 같거나 이보다 최소한 큰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내포된 구역으로 한다.

대륙변계의 대륙융기가 충적암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대륙사면단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고정지점을 연결한 선을 내포된 구역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륙변계 외연은 영해 기선에서 350해리를 초과하거나 2,500m 등수심선에서 100해리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대륙변계 외연을 잇는 선의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않는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각기 경·위도로 지리적 좌표를 명기하여야 한다.⁶⁾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산맥에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350해리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해저고지가 대륙변계(大陸邊界)를 구성한 때는 350해리를 넘어서 대륙변계의 외연을 인정한다.⁷⁾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변계의 외연을 대륙붕의 외측한계로 확정하고자 하는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상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범위의 확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범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⁸⁾

4) 동조 후단.

5) 동조 제3항.

6) 동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

7) 동조 제6항.

8) 동조 제8항.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1)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법적근거에 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권리는 대륙붕에 대한 점유를 요건으로 발생하는지, 선언 또는 입법을 근거로 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원천적·본래적으로 연안국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동안 논의되어 온 대륙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대체로 3가지의 견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선언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주장되어야 하며 그 해저에 대한 유효한 통제가 행사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견해는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수요와 개발의 당위성 등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대한 권리행사의 유효요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세 번째 견해는 대륙붕은 연안국에 원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연안국이 대륙붕의 권리를 특별히 주장하거나 그 해저를 점유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행위가 없이도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이미 원초적으로 (*ipso facto ab initio*)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안국의 권리는 대륙붕이 연안국 영토의 확장이라는 데에 그 법적 근거가 있으며 대륙붕에서의 자원의 탐사, 개발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하여 이를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는데⁹⁾, 이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 지역의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타국은 그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활동을 하거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배타적이며 대륙붕의 실효적 또는 관념적 점유나 그에 관한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원적 권리(始原的 權利)이다.¹⁰⁾

9) 동 제77조 제1항.

10)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larendon Press, Oxford, 1982, pp.482~484.

2)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① 천연자원의 개발권

이처럼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대륙붕의 광물자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망간, 티타늄, 크롬, 주석 등 중금속의 광물자원이 있다.

한편, 1945년의 Truman선언은 광물자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58년 대륙붕협약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산호, 해면(海綿), 진주조개, 굴 등의 정착성 생물자원을 ‘천연자원’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정착성어종이란 수확단계에서 해저의 표면이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거나 해저나 그 하층토에서 계속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를 말하는 것으로¹¹⁾, 굴, 전복, 조개, 산호, 해면, 진주패 등을 말한다.

② 공해자유원칙에 대한 제한

연안국 대륙붕에서의 탐사·개발행위는 공해상에서 행해지므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공해자유 원칙과 관련된다.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공해인 그 상부수역과 그 상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그러나 대륙붕 개발행위가 공해에서 행해지는 이상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은 사실상 대륙붕의 상부수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연안국이 자국의 대륙붕을 탐사·개발하려는 외국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고, 대륙붕 위의 시설을 손상하거나 안전구역에서의 규제에 위반하는 외국선박을 추적·나포하여 국내법에 따라 체제를 가하는 것 등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안국의 이러한 관할권 행사는 대륙붕의 상부수역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공해자유 원칙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동조 제4항.

12) 동 제78조 제1항.

③ 인공시설 및 안전수역의 설치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시설의 외면 각점으로부터 500m에 달하는 주변까지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³⁾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안전구역의 출입금지, 항로의 지정, 통과할 선박의 종류와 크기의 한정, 정박의 금지 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연안국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통고조치를 하고 시설의 존재를 경고하는 항구적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2) 연안국의 의무

① 상부수역의 항행자유보장의무

연안국은 외국 선박·항공기의 대륙붕의 상부수역 항행 및 상공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¹⁴⁾

②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허용의무

연안국은 외국이 대륙붕에 해저전선·관선을 부설할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안국은 대륙붕 탐사·천연자원 개발 및 관선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감소 및 규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나, 전선 또는 관선의 부설·유지를 방해하지 못하며, 다만 관선의 부설경로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설정해야 한다.¹⁵⁾

③ 기여금의 납부의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개발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서의 비생물자원의 개발에 대하여 기여금을 금전 또는 현물로 납부할 의무를 연안국에 부과하고 있다.¹⁶⁾

13) 동 제80조.

14) 동 제78조.

15) 동 제79조.

16) 동 제82조.

3)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비교

(1) 주권적 권리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¹⁷⁾ 또한,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¹⁸⁾

<표 2-1 > 주권 · 관할권 · 주권적 권리의 차이

구분	주 권	관 할 권	주권적 권리
특 징	절대권(주물)	상대권(종물) -주물의 처분에 따름	상대권(종물) -주물의 처분에 따름
대 상	국가영역, 사람, 물건	특정공간, 인적, 물적 관할 (형사, 민사, 행정)	관할수역 내 자원
내 용	소유, 이용, 처분	이용, 관리 (처분할 수 없음)	이용, 관리 (처분할 수 없음)

여기서 주권적 권리란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에 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국가관할수역 내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등 자원의 이용 및 관리권한을 의미한다. 주권적 권리는 그 권리 자체만의 처분권이 없으며, 종물로서 주물인 국가주권의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대내적 최고이며 대외적 독립인 국가의 일반의사를 의미하는 국가주권이 소유, 사용 및 처분을 포함한 절대적 권리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2) 외측한계

해양법협약에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350해리 이원(以遠)까지 확대할 수 있

17) 동 제56조.

18) 동 제77조.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⁹⁾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한계는 기선에서 200해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²⁰⁾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한계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륙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은 양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1998년 6월에 발효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중국의 대륙붕은 대륙변계 외연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발효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자연연장으로서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고 대륙붕의 범위를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라고 주장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동일시하고 있다.

한편,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한계가 동일하게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1984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대륙붕에도 배타적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거리’ 기준을 도입하여 양자의 외측한계를 동일하게 판결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륙붕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분존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공평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 간의 합의로서 대륙붕의 경계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다른 사례도 적지 않다.²¹⁾

이와 같이 볼 때에,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의 폭은 400해리가 되지 않으므로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어 있다. 한편, 이 수역은 우리나라가 이미 ‘해저광물자원법’에 의하여 제4광구, 제5광구 및 제7광구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제7광구는 오키나와해구의 최심선을 기준으로 그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중국해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이 해양경계획정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와는 별도로 더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19) 동 제76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20) 동 제57조.

21) 예를 들면, 1978년 파푸아뉴기니,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1999년 영국과 덴마크 등은 석유부존 가능성과 어업자원의 부존상태의 차이에 따라 대륙붕 경계와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각각 달리 확정할 바 있음.

3. 동북아의 대륙붕 탐사개발 현황

1) 한국

최근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동해 6-1 가스전이 2004년 11월 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천연가스 상업생산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은 1964년 국내 대륙붕 탐사를 시작하였으며 40년 만에 산유국이 된 것이다. 동해 6-1 가스전은 국내 기술진에 의해 12번의 시추 끝에 발견에 성공한 것이다. 울산 앞바다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동해-1가스전의 매장량은 2,500억 입방 피트, LNG로 환산할 경우 500만 톤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향후 15년간 경남지역에 매년 40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양은 우리나라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의 2.2%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으며 12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개발경험을 통해 앞으로 대륙붕 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실시된 최초의 과학적 석유탐사 작업은 '59년부터 전남 해남시 우항리 일대에 대해 실시된 석유탐사가 시초로 당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에서 반(半) 고체상 유기물질들을 시추로 확인하였다. 이 지역의 우항리 오일 셰일은 원유의 근원암으로 작용하며 석유생성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이는 서해분지에서 중생대시기에 석유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해주고 있으며, 서해 광구에서 탐사를 추진하게 한 석유지질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동쪽에서는 1964~1968년에 실시된 포항지역에 대한 탐사였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 없이 시추가 중단되었다. 1975~1977년 기간 동안 포항지역에 대한 탐사가 재개되어 물리탐사 및 시추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미약한 가스 산출만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한국 근해 대륙붕에서 석유 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본격 거론된 시기는 1960년대 말이다. 1968년도엔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산하 '아시아지역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CCOP)와 '미 해군 해양연구소'가 대륙붕 전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대륙붕 해저에 두터운 제3기 퇴적층이 분포되어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

다. 이에 고무된 미국의 Texaco, Gulf 및 네덜란드의 Shell사 등은 발빠르게 국내대륙붕 석유탐사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륙붕에 대한 석유탐사를 본격 개시하고자 1970년 1월 1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대륙붕에 7개 해저광구 설정 및 조광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 시점으로부터 외국회사의 석유개발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2-2> 국내 대륙붕의 지역별 탐사현황

지 역	탐사현황
동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공 탐사시추, 6공 가스발견 - 1공 상업적 성공 (동해-1) - 동해-1 가스전 7월 생산 개시 -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중
서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공 탐사시추 - 유가스 징후 없음
남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공 탐사시추 - 5공 유가스 징후 - 가장 넓고 유정을 보인 분지

자료 : 한국석유개발공사, 자료집(2004).

1972년도에는 한일 양국의 주장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공동개발 추진이 합의되어, 양국 간의 대륙붕 경계협정이 이루어지고(1974년 1월 30일) 1978년 6월 22일 양국 정부 간 비준서의 교환(유효기간 50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일 공동광구에 대한 석유개발이 추진되었다. 반면 중국과는 당시 국교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륙붕 경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구가 획정되었고 외국석유회사에 광구가 분양되었다.

국내의 본격적인 석유탐사 활동을 시작한 때는 1979년 석유공사가 설립되고 난 1983년 이후다. 기존의 외국석유회사의 탐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국내 대륙붕의 퇴적분지 분포 및 석유 부존구조를 규명하지 못하여 석유부존을 지시하는 석유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부족한 면이 많았다.

1983년 이후에는 한국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하여 석유탐사활동이 전개되어 본격적인 물리탐사와 시추가 실시되었으며, 석유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저 제6-1광구 돌고래 지역과 고래 지역에서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하는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대륙붕에서는 제6-1광구를 중심으로 총 243,311L-km의 물리탐사와 37개공의 시추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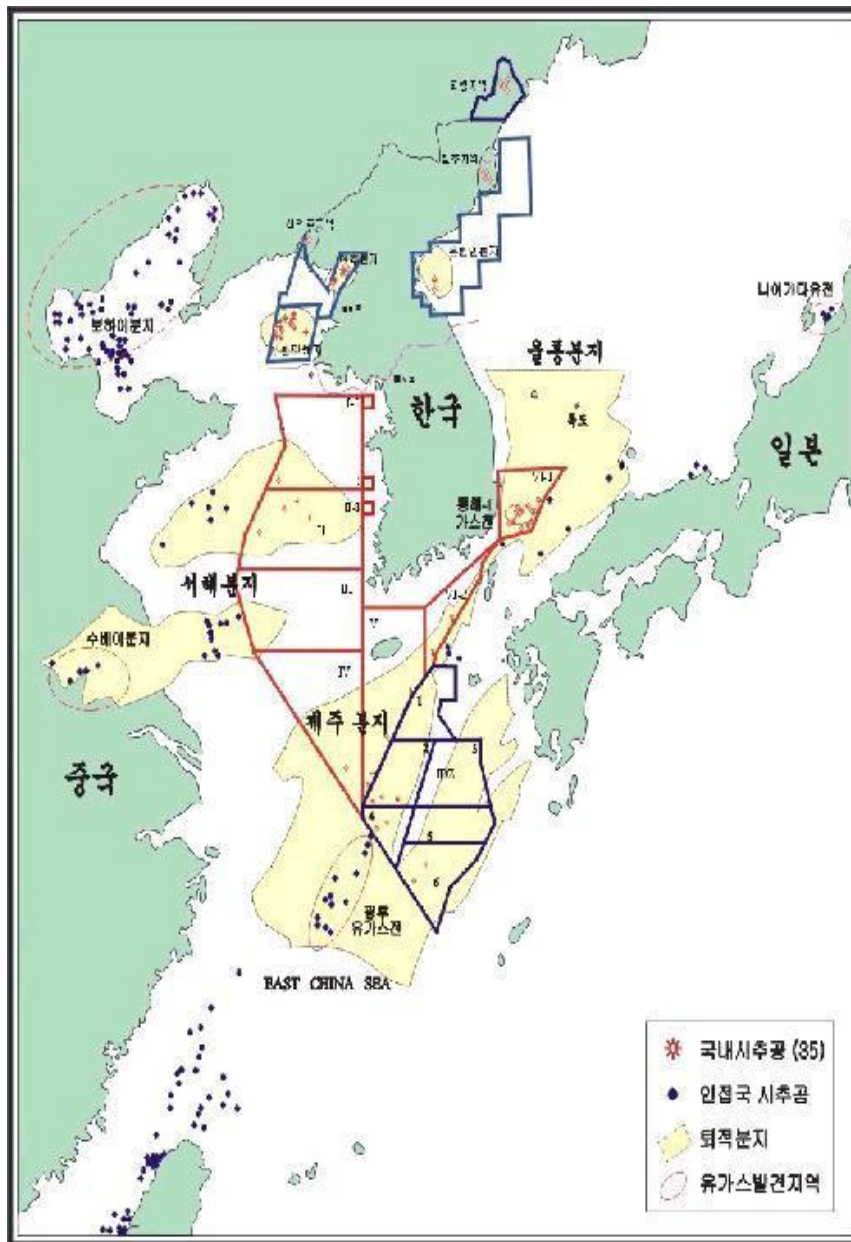
2004년 8월까지의 해저광구 탐사현황은 다음의 표, 그림과 같다.

<표 2-3>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 탐사현황

광구명	면적(km ²)	물리탐사(L-km)	시추공
제1광구	36,460	6,447	1
제2광구	39,443	35,468	4
제3광구	41,427	8,193	-
제4광구	42,449	11,314	1
제5광구	30,103	11,995	2
제6-1 광구	12,918	101,441	17
제6-2 광구	11,688	10,998	2
한·일공동개발구역(JDZ)	82,557	54,840	7
동해지역	-	2,115	
서해지역	-	470	
계	297,045	243,311	37

자료 : 한국석유개발공사, 자료집(2004).

<그림 2-1> 국내 대륙붕 주요분지 광구탐사현황



자료 : 한국석유개발공사, 자료집(2004).

2) 중국

중국에는 약 183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매장량의 1.7%에 달하는 양이다.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일일 339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204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다(2002년 기준).

천연가스도 50조 입방피트(세계의 1.0%)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산정수가 72,255개(2001년 기준)에 달하며 생산량의 약 90%는 육상 유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대형유전은 동북부에 있다.

여기서 동북부의 대형유전들은 유전 성숙화로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부지역 및 해양 유전의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동부지역의 원유 생산량을 현행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한편, 서부지역 신규 유전에서의 생산량을 증대하고, 서부지역의 석유가스를 소비지인 동부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주요 유전별 원유생산 추이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중국의 주요 유전별 원유생산 추이

단위: 천b/d

구 분	API	1999	2000	2001	2002
대 경		1,108	1,057	1,030	1,007
승 리	32.1	541	534	534	n.a
요 하	22.5	291	279	277	n.a
신장(타림등)	n.a	267	270	288	300
해 양	30.0	323	379	408	n.a
기 타	37.0	683	733	769	n.a
계		3,213	3,252	3,306	3,387

자료 : 산업자원부, 통계자료(2004).

또한 중국은 해양 유전의 탐사개발을 강화하고 기존 생산 유전의 증산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탐사개발 및 생산 유전의 매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 석유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Bohai 만, 동중국해, 남

중국해 등에서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 활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CNOOC가 주도하는 해양유전은 1996년에 30만 b/d, 2001년에 41만 b/d를 생산하게 되어 Daqing유전 등의 생산량 감소에 의한 부족분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 CNOOC은 2005년에 해양지역에서 60만 b/d의 원유와 연간 4,060억 cf(입방피트)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국무원(State Council),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상무부, 국토자원부 등 정부기구가 석유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상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2003년 3월, 정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SDPC)를 통합,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를 설립하였으며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 석유가스 프로젝트 승인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총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NDRC 산하에 설립(2003년 5월 말)된 에너지국(Energy Bureau)은 석유 등 에너지 부문 정책개발, 전략석유 비축 관리 등을,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는 자국 및 외국회사에 대한 석유 수입허가권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자원부(MLNR, Ministry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는 석유와 천연가스전의 매장량 확인 등을 담당한다.

중국은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해 약 6억 달러를 탐사작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유전개발, 인프라 구축 등 개발 및 생산 활동을 위해 2001년~2005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팽호(平湖) 가스유전을 완성시킨 바 있다. 팽호 가스유전은 상하이 동남방 약 400km 지점에 위치하는데 1970년대부터 이 지역에 대한 탐사를 계속해 왔다. 조사지점 중 이 팽호 가스유전이 가장 유망한 지점으로 이곳의 매장량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천연가스 108억 m³, Condensate유 177만 t, 경질원유 1,078만 t) 향후 15년간 상하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동중국해 중 일본 주변해역에서 활발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1996년에는 15건, 1997년 4건, 1998년 14건의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그림 2-2>는 중국 해양조사선의 조사해역도이다.

석유의 자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일본의 자주 원유개발 비중은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91년 12.05%를 기록했던 일본의 자주개발 원유 비중은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15.4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에는 그 비중이 11.46%까지 줄어 들었다.

일본의 석유정책은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으로 석유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석유관련 제한규정의 철폐 및 완화를 통해 국내석유시장 안정과 경쟁력 확보에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주석유개발에 대한 의미를 석유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석유공급원의 다각화, 석유 대소비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책무 수행, 산유국의 석유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등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4) 대만

대만의 석유매장량은 약 400만 배럴이며 천연가스는 2.7조 입방피트 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대만의 석유 및 가스자원 개발은 해양 및 내륙 모두 대만석유개발국(Taiwan Petroleum Exploration Division, TPED)가 수행하고 있지만, 외국에서의 탐사 및 생산 활동은 해외석유투자공사(OPIC : Overseas Petroleum and Investment Corporation)가 수행하고 있다. 내륙의 생산유전(친슈, 티찬산, 추후앙캥, 친샤우 융호산 파오산, 쉬닌 및 파찬시)들은 거의 모두 서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74개의 유정에서 총 8,474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생산되었다(1998년 기준).

1972년 12월 대만석유공사(CPC :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가 탐사를 시작한 이래 131개의 유정이 시추되었으며, 가오슝, 켈룽, 팽후, 루강 및 친슈 인근의 해양에서 석유 및 가스 매장 징후가 나타났고, 1986년 10월에는 친슈 인근 해역에서 가스 생산을 시작하였다. 비록 생산량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사정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대만석유공사는 가오슝 인근 해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유전을 7~8개 가량 발견한 이후 대만석유

공사는 상업적인 생산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대만석유공사는 1997년 말 이후 북부,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석유자원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대만석유공사와 중국의 국영 해양석유총공사(CNOOC :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는 지난 1996년 대만 해협의 5,939평방마일을 공동 탐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만은 1998년 3월 동 계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했으며, 양사는 1999년 10월 첫 번째 탄성과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5월에 공동개발협정이 이루어졌다.

제 3 장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 및 제출

1. 대륙붕한계위원회

1)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연안국의 기선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사국회의에 권고²²⁾하는 것과 연안국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할 때 필요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 개최되고 소위원회 및 하부기구의 회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위원회는 1997년에 설립된 이래 모두 13차의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표 3-1> 참조).

2) 조직

해양법협약의 부속서 II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조직된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회의의 하부기관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공평한 지리적 대표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 선출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또는 수리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²³⁾

22)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23) 동 협약 제2부속서 제2조 제1항.

<표 3-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회의경과

내용 회기	회의 일시	장소	회 의 내 용
제1회기	1997. 6.16 ~ 6.20	뉴욕	○ 대륙붕한계위원회 설립, 위원 선출 ○ 위원회 의사절차규칙 제정
제2회기	1997.11. 2 ~ 11.12	뉴욕	○ 의사절차규칙의 개정 ○ 과학, 기술지침 논의
제3회기	1998. 5. 4 ~ 5.15	뉴욕	○ 과학, 기술지침에 관한 편집작업반 설치
제4회기	1998. 8.31 ~ 9. 4	뉴욕	○ 과학, 기술지침 초안 작성
제5회기	1999. 5. 3 ~ 5.14	뉴욕	○ 과학, 기술지침 최종초안 작성, 배포
제6회기	1999. 8.30 ~ 9. 3	뉴욕	○ 과학, 기술지침 최종초안 검토
제7회기	2000. 5. 1 ~ 5. 5	뉴욕	○ 개도국의 대륙붕자료 작성 관련정책 및 법적 전문가 지명 논의
제8회기	2000. 8.28 ~ 9. 1	뉴욕	○ 대륙붕자료 작성관련 훈련계획 논의
제9회기	2001. 5.21 ~ 5.25	뉴욕	○ 대륙붕자료 작성관련 훈련계획 논의 ○ 소위원회의 의사절차 논의
제10회기	2002. 3.25 ~ 4.12	뉴욕	○ 러시아의 대륙붕자료 검토 ○ 러시아 자료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제11회기	2002. 6.24 ~ 6.28	뉴욕	○ 제2기 신입위원회 업무개시 ○ 소위원회의 러시아자료 검토결과 보고
제12회기	2003. 4.28 ~ 5. 2	뉴욕	○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검토 ○ 제출자료의 기밀유지
제13회기	2004. 4.26 ~ 4.30	뉴욕	○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검토

자료 : 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purpose.htm, p.3.

위원회는 해양법협약의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설립하기로 하고²⁴⁾ 1996년 5월 16일까지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간에 개최된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위원회의 설치를 10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1997년 9월에 정식으로 설치되었다.²⁵⁾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당사국회의에서 2/3 이상 당사국이 출석하고 출석한 당사국의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공평한 지리적 배분으로 선출한다.’²⁶⁾

24) 동조 제2항.

25) SPLOS/64(2001. 5. 1), p.14. in www.un.org/Depts/los.

26) Annex II.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이하에서는 Annex II 라 약칭) Article 2, Para.1. 구체적인 지리적 배분은 제12차 해양법당사국회의에서 아시아 5명, 아프리카 4명, 서구 4명, 동구 4명, 미주 및 카리브 4명으로 결정한 바 있음.

2002년 4월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당사국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제2차 임기의 위원들은 2002년 6월 16일부터 직무를 개시하였다.²⁷⁾ 2004년 12월 현재,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

(2004년 12월 현재)

위 원	국 적	위 원	국 적
Park, Yong-Ahn	대한민국	Juračić, Mladen	크로아티아
Albuquerque	브라질	Kazmin, Yuri Borisovitch	러시아
Astiz, Osvado Perdo	아르헨티나	Lu, Wenzheng	중국
Awosika, Lawrence Folajimi	나이지리아	Al-Azri	오만
Betah, Samuel Sona	카메룬	Pimentel, Fernando Manuel Maia	포르투갈
Brekke, Harald	노르웨이	Symonds, Philip Alexander	호주
Carrera Hurtad, Galo	멕시코	Tamaki, Kensaku	일본
Croker, Peter F.	아일랜드	Thakur, Naresh Kumer	인도
Fagoonee, Indurlall	모리타니	Woeledji, Yao Ubuénalé	토고
Francis, Noel Newton St. Claver	자메이카	Jaafar, Abu Bakar	말레이시아
German, Mihai Silviu	루마니아		

자료: 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members.htm, p.1.

위원회의 기구로는 위원회나 소위원회 및 하부기구에서 채택하는 의사절차규칙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Editorial Committee와 대륙붕 자료의 설정과 관련된 교육기관인 Training Committee가 있고, 연안국이 대륙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임시기구인 하부위원회(Subcommission)가 있다.²⁸⁾

27) www.un.org/Depts/los/clcs-new/commission_members.htm, p.1.

28) Annex II, Article 1 및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3/Rev.3) 참조.

위원회는 위원 21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관에 해당하는데, 협약의 이행을 위한 회의를 매년 1차례 이상 당사국의 2/3 이상 출석을 전제로 개최한다.²⁹⁾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³⁰⁾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대륙붕 자료의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대륙붕 자료를 제출한 국가의 위원은 소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으나, 투표권 없이 검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³¹⁾

3) 기타

각 위원은 위원회 등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되, 원칙적으로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결정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소진된 경우에 본질문제에 대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그 밖의 문제에 대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³²⁾

위원의 국적국가는 위원회의 경비를 부담하며,³³⁾ 위원회 및 하부기구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아랍어의 6개 언어이다.³⁴⁾

2. 과학기술 지침

1) 목적

위원회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외측한계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연안국을 지도할 목적으로 이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지침서는 위원회가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 증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³⁵⁾ 이는

29) 위원회 절차규칙 제2조 및 제19조.

30) 동 제41조 제1항.

31) 동 제2항.

32) 동 제35조 내지 제38조 참조.

33) 동 제9조.

34) 동 제24조.

35) CLCS, CLCS/11, 13 May 1999, p.4.

협약에서 사용되는 법조문이나 과학용어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과학·기술용어를 해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학적,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또한, 연안국이 제출할 과학·기술적 증거를 준비하는 동안 일관되고 확대된 관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동 지침서는 유엔해양법 제 76 조와 부속서 II에 근거하여 연안국이 제출하는 문건을 심사·권고하는 근거가 된다.

지침서의 제1장은 문제 제기, 제2장은 대륙붕의 권원 및 그 외측한계의 확정과 관련된 문제, 제3장은 길이 단위의 재검토 및 미터법에 기초한 대륙붕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지학적 방법, 제4장은 2,500미터 등심선과 기타 지형학적 특징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수로학적 방법, 제5장은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경점으로서 대륙사면 끝의 위치 결정, 제6장은 제5장의 대륙사면 끝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대안 제시, 제7장은 대양저 산맥과 해저산맥, 기타 해저고지의 분류와 처리방법, 제8장은 퇴적층 두께의 결정과 그 오차범위 추정에 적용되는 지구물리학적 방법, 제9장은 대륙붕외측한계와 관련된 제출문건에 포함되는 자료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동 지침서는 각 학문분야의 과학원리 또는 정밀한 기술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³⁶⁾

지침의 작성에는 과학·기술 단체, 정부 및 비정부기관에서 발행된 문헌과 학술지, 학술회의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성립경과³⁷⁾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과학·기술 지침서의 준비는 두 가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는 학문적 그리고 학제적 연구의 방향으로 수행된 기초연구단계이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1997년 9월 제2차 회기에서 6개의 연구그룹을 편성하였는데, 수리학, 측지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대륙사면의 끝, 대륙주변부의 외연에 관한 연구그룹이다.

두 번째는 1998년 5월 3일부터 1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위원회

36) CLCS, CLCS/11, 13 May 1999, p.5.

37) CLCS, CLCS/11, 13 May 1999, pp.1~3.

의 제3차 회기에서 시작된 지침서 초안의 준비단계였다. 제3차 위원회에서 편집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원장으로서 Galo Carrera가 선출되었다. 편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안하는 지침서의 문서 구성을 심사하고 채택하였다.

편집위원회는 13개의 작업반으로 편성되었는데, 서론,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한 권원과 획정, 측지학적 방법과 대륙붕의 외측한계, 2,500미터 등심선,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화로 결정된 대륙사면의 끝, 상반의 증거에 의하여 결정된 대륙사면의 끝, 산맥, 퇴적물 두께에 근거한 대륙붕 외측한계의 획정, 확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 참고문헌과 관계서적 목록, 국제 기구의 목록,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요약하는 흐름도, 표 및 그림, 교정 등의 작업반이다.

편집 위원회는 처음 12개의 작업반에게 10개의 장과 2개의 부속서를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교정 작업반에 두 가지 임무가 위임되었다. 첫째는 1993년과 1995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그룹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근거하여 해양 및 해양법부에 의하여 준비된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의 전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이러한 문제가 지침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12개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반은 지침서의 임시적인 초안 윤곽을 작성하였고, 이는 위원회의 제3차 회기 동안 개최된 편집 위원회 총회에서 토의되었다.

모든 작업반은 1998년 회기 사이의 기간에 대부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1998년 7월 20일 지침서 초안의 교정판이 편집 위원장에게 제출되었고, 위원장은 내용과 양식을 통일하기 위한 편집을 수행하였다.

편집 위원회는 1998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위원회의 제4차 회기에서 재개되었다. 편집 위원장이 편집한 지침서의 초안은 여러 차례 개최된 편집 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이 회의에서 교정 작업을 반복하여 수정 및 해설을 도입하였다. 이때 교정 작업반은 이 회기에서 편집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최종 초안에 근거하여 중간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였다.

편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4차 회기의 최종 회의에서 심사를 위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지침서의 최종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 1998년과 1999년의 제4차 및 제5차 회의에서 교정 작업반이 준비한 중간보고서를 심사하여 1999년 5월 13일에 채택하였다.

동 지침서를 유엔의 공식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 및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다.

3) 주요 내용

(1) 대륙붕 외측한계의 권원³⁸⁾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가 대륙주변부의 외측 끝까지 자연적 연장이 되는 해저와 그 하층토를 포함하며(자연연장 표준), 또는 대륙주변부의 외측 끝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다(거리 표준).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대륙주변부가 200해리 이원까지 확장되는 경우 반드시 대륙주변부의 외측 끝을 확정하여야 하며, 대륙주변부는 해면하의 연안국 영토의 해면하의 자연연장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의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되 심해 대양저와 대양저 산맥 또는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퇴적층의 두께가 대륙사면 끝의 고정점으로부터 최단거리의 최소한 1%인 최외곽 고정점을 연결한 선 또는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 7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한 선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대륙붕 외측한계는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 또는 대륙사면 끝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연결되는 선까지 확장될 수 있다.

(2) 측지단위³⁹⁾

해양법협약에는 두 가지 길이 단위가 사용되는데, 미터(m)와 해리(M)이다. 두 단위는 국제단위체계(SI)⁴⁰⁾의 일부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터법의 정의는 1983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1929년 국제수로국⁴¹⁾에 의하여 채택된 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해리의 거리는 1852미터이다.

38) CLCS, CLCS/11, 13 May 1999, pp.9~24.

39) CLCS, CLCS/11, 13 May 1999, pp.26~28.

40)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 1991.

41) 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양 공간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모든 거리는 반드시 어떤 기준면 위에서 측정되어야 하는데, 협약은 그 기준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 대신 평균해수면, 지오이드 또는 해저면 등의 기준들을 거리 측정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를 제출하는 연안국은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지구좌표체계⁴²⁾에 따른 대륙붕 외측한계 좌표,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지구좌표체계와 제출문건에 사용된 참고체계 사이의 변환변수, 변환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과학적 방법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⁴³⁾과 국제수로기구에 의하여 각기 채택된 국제지구좌표체계를 하나의 국제표준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출문건의 심사에 있어서 연안국에게 자료출처, 탐사위치 결정기술, 탐사날짜 및 시간, 자료보정법, 무작위 오차 또는 계통오차의 선 또는 후 평가, 측지학적 참고체계, 직선, 군도, 복합기선의 기하학적 정의 등과 같은 측지학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연안국은 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 최외측 고정점들에 대하여 각 점에서 퇴적층의 두께가 그 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 1%이어야 하고, 둘째,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의 거리까지, 셋째,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 해리의 거리까지, 넷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의 거리까지이어야 하는 등 총 네 가지 요소다.

(3) 2,500미터 등심선⁴⁴⁾

2,500미터 등심선은 대륙붕 외측한계의 확정을 위한 제한요소의 하나로 적용되는데, 대륙붕의 외측한계선을 연결하는 고정점은 영해의 폭이 측정된 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42) ITRS: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System.

43) IUGG: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44) CLCS, CLCS/11, 13 May 1999, pp.34~37.

제출자료에서 2,500미터 등심선의 획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단일빔 수중 음향 측심, 다중빔 수중 음향 측심, 측면주사 측심, 간섭 측면주사 측심 및 탄성과 반사 측심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탄성과 반사 측심, 간섭 측면주사 측심 및 측면주사기에 의한 모든 획득 가능한 증거들은 보조자료로 인정한다.

인공위성에 의한 수심자료 또는 화상 측면주사기 자료 등은 2,500미터 등심선 획정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2,500미터 등심선 획정에는, 자료출처, 음향탐사기술과 분류, 측지학적 참고 체계, 항해위치 선정방법 및 오차, 탐사시간과 날짜, 음파진행 경로와 속도, 보정법, 조석 및 그 외 자료에 적용된 수정법, 무작위 오차와 계통 오차의 선 또는 후평가 및 수심자료 등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대륙사면단⁴⁵⁾

대륙사면단은, 퇴적층의 두께가 각 최외측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 1%인 최외측 고정점을 제 7항에 따라 연결한 선 또는 대륙사면의 최하점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따라서, 대륙사면단은 대륙사면 기저부로 정의되는 지역의 확인 및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의 위치 획정에 관한 수심, 지형,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장 시료와 측량, 지화학 및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 지구물리학적 측량 및 측면주사 화상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퇴적물의 두께⁴⁶⁾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퇴적암의 두께가 각 최외곽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 끝까지의 최단거리의 최소한 1%인 최외곽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퇴적물 두께 공식은 대륙대의 퇴적물이 바다 쪽으로 점차 얇아진다는 논리에 근거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 연안국은 대륙사면 끝의 위치와 그 점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생성된 퇴적물의 두께에 대해 퇴적물 및 기반암 경계면의 결정, 퇴적물 두께의 계산 및 퇴적물 분포의 다양성 등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CLCS, CLCS/11, 13 May 1999, pp.44~52.

46) CLCS, CLCS/11, 13 May 1999, pp.57~71.

퇴적물의 두께는 직접적인 채취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직접적인 채취는 시추에 의하여 수행되고, 간접적인 방법은 음파탐사와 중자력 측정을 포함한다.

연안국은 동일하고 연속적인 퇴적물 에이프런에서 1% 또는 그 이상의 퇴적물 두께가 나타나는 최외곽 지점을 선택하고 선택된 각 고정점에서의 퇴적물과 대륙사면 끝에서의 퇴적물 사이에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3. 설정방법

1) 설정기준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규정한 위와 같은 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다수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대륙붕의 범위를 위해 허용된 세 가지 기준은 모두 법적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첫째, 200m 수심 기준은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일정범위의 연안 해저라는 특성에 비추어 ‘범위’를 특정시키기에는 부적절하고도 모호한 지형학적 특성에 불과하다.

둘째, ‘개발가능성’ 기준은 1953년 ILC의 초안 심의 때나,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반대의견이 제시된 항목이다. 이 기준은 대륙붕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양태(樣態)의 활동을 포함한다. 극단적으로 여류를 소량 채취하는 것부터 해저 석유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유전개발을 시굴 및 운영하는 활동까지 모두 ‘개발’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는 연안국만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지 또는 다른 국가의 능력까지 모두 동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세 번째, ‘연접성(連接性)’ 기준은 대륙붕의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범위’를 특정시킴에 있어서는 위의 다른 두 요소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반감되는 결과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 특히 해양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실제로 개발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더욱 무의미하게 하였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가

능하지 않는 해저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주장은 사실상 외측한계 없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58년 대륙붕협약 제1조의 표현 중 ‘연안에 연접한’(adjacent to the coast)이라는 문구는 연안에서 무제한으로 확장된 대륙붕의 범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이미 있었다. 또 프랑스는 1965년에 대륙붕협약에 조인(調印)하면서 별도의 선언을 통해 이 문구가 대륙붕 범위의 무제한적 확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과, 따라서 프랑스는 200m 등수심선(等水深線) 이원(以遠)의 어떠한 대륙붕 범위도 인정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협약 제7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면,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에 법률상의 ‘대륙붕의 범위’에는 ‘지형학적 의미의 심해저(deep ocean floor or plain)’까지 포함되게 된다.

실제로 제76조의 대륙붕 범위 규정을 대서양 연안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륙변계(大陸邊界)가 200해리에 못 미침으로써, 심해저까지 연안국에 포함되는 경우는 전체의 67%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제76조 제4항(a)(i)에서 규정하는 대륙융기(大陸隆起)의 충적암에 의한 기준(Irish Formular)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23%라고 한다.

태평양 연안은 그나마 대서양보다도 대륙융기(大陸隆起)가 더욱 분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부분 제76조 제1항 후단(後段)이 적용되게 되며, 법률상 연안대륙붕의 범위에는 대부분 심해저가 포함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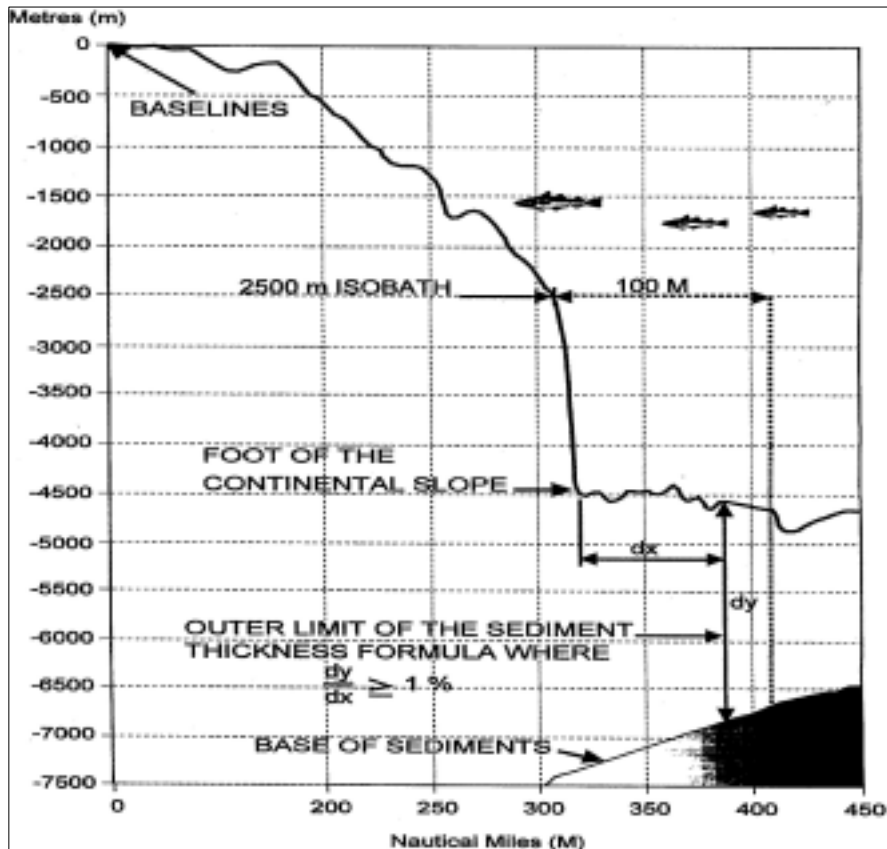
이들 경우 상부수역(上部水域) 및 해면(海面)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로 연안국 관할수역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질학적 대륙변계(大陸邊界) 외측해저가 유엔해양법상 대륙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야기되는 실제적 혼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개발 운용될 심해저 제도와와의 조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제76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위 대륙사면단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충적암의 두께가 최단거리의 1%인 최외곽 고정지점의 결정은 결국 연안국의 자의(恣意)가 개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제76조 제8항 후단).

2) 설정방법

이와 같이,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대하여 최대폭은 350해리의 선 또는 2,500미터의 등심선부터 100해리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대륙토괴의 자연연장이라는 기준과 거리기준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안국은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⁴⁷⁾

<그림 3-1> 대륙붕의 외측한계



자 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19.

47) 동 제76조 제1항~제9항.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대륙변계의 외연까지
 - $\frac{\text{퇴적암두께}}{\text{고정점에서 대륙사면단까지의 거리}} \geq \frac{1}{100}$ 되는 고정점
- 대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
- 위의 조건 하에 그은 고정선은 350해리 이내
- 또는 2,500m 등수심선에서 100해리 이내의 고정선
- 이들 고정선은 그 1개의 길이가 6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중에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기준은 주로 아랍국가들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며, 등수심 2,500m 기준은 방대한 대륙붕을 가진 구소련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며, 350해리 기준은 아일랜드의 제안이 수용된 것이다.⁴⁸⁾

제76조에 가장 곤란한 점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지질학적 또는 지리학적 용어를 대륙붕 외측한계 기준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76조 제3항 단서로, 해양산맥은 대륙붕의 범위에서 배제되며, 해저산맥과 해저고지는 모두 대륙붕에 속하게 된다. 해저산맥은 350해리를 넘을 수 없는데, 해저고지는 350해리를 넘는 대륙변계의 범위까지 대륙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저산맥과 해저고지는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으로 구별 가능한 개념일 것이나, 이들이 대륙 외측한계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법적 용어 정의가 있어야만 한다. 협약 본문에 이러한 용어 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조문을 번잡하게 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약의 부속서에라도 각 개념의 구별과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999년 5월의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이 대륙붕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과학 및 기술 지침⁴⁹⁾을 만들었는데, 이는 대륙붕 자료의 준비 및 제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수로학, 측지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대륙사면 및 대륙대의 외측경계의 6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경계확선에 관한 도상연습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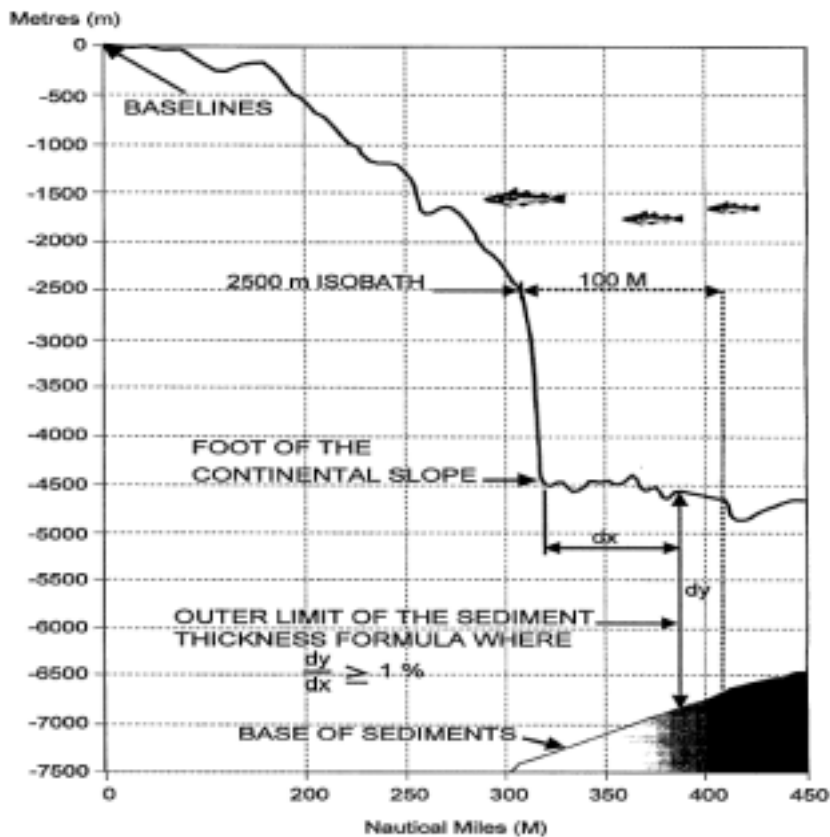
48) 박춘호,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해양정책연구」, 제9권 제2호(1994. 12), p.220.

49)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13 May 1999 at its fifth session. in CLCS/11. in www.un.org/Depts/los.

한다. 다른 하나는 총괄, 대륙붕 외측한계의 권원 및 획선,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에 관한 측지학적 방법, 2,500m 등수심, 최대경사도를 적용한 대륙사면부, 관련증거를 적용한 대륙사면부, 해양대, 퇴적층의 두께에 의한 대륙붕 외측한계의 획선, 대륙붕 외측한계와 관련된 정보, 상세설명 및 자료목록, 국제기구의 목록,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절차에 관한 도식, 도표 및 그림, 기타 관리 등 13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편집 위원회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협의하여 채택한다.⁵⁰⁾

위와 같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침에 의하여 대륙붕한계 설정방법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그림 3-2> 1%의 대륙붕 퇴적물 두께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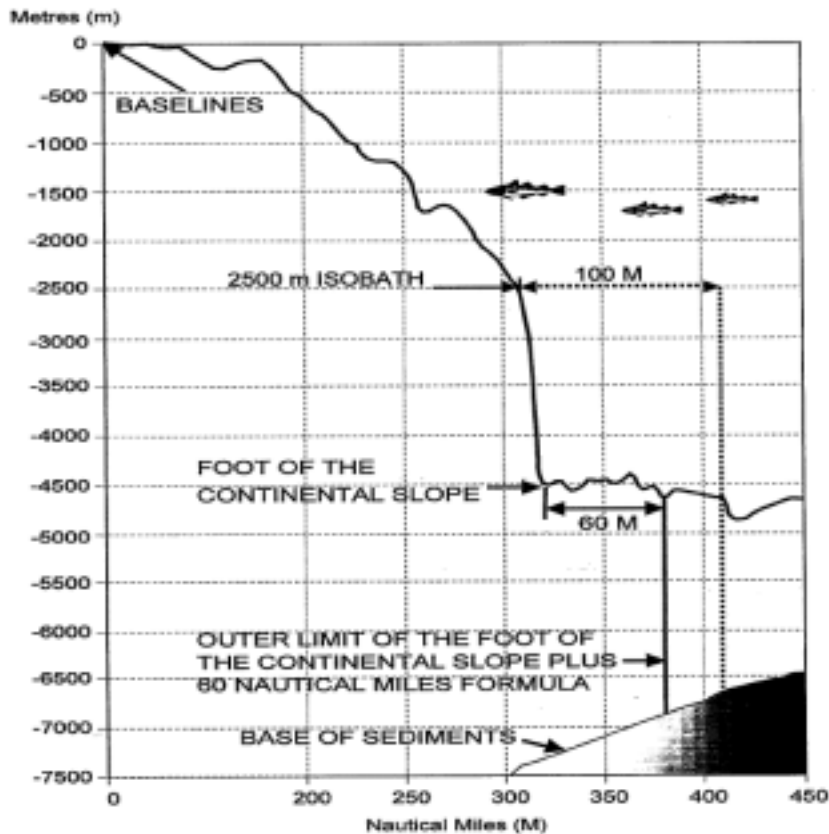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50)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p.3~4. in www.un.org/Depts/los.

<그림 3-2>는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므로, 연안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대륙변계의 외연까지 이은 선에서 외측한 계 지점에서 대륙사면단까지의 거리(dx)를 분모로 하고 그 점에서의 퇴적암 두께(dy)를 분자로 하여 그것이 1% 이상이 되는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 대륙사면단 + 60해리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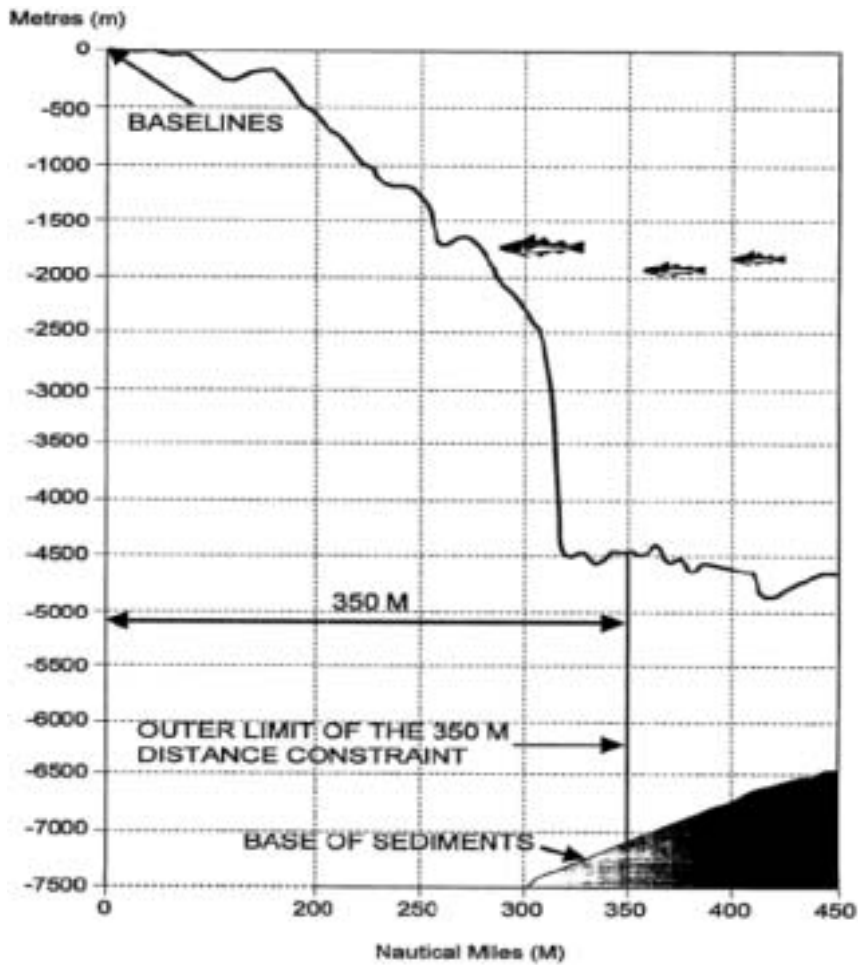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그림 3-3>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 공식에 의하면 퇴적층 두께가 아주 적어 불리한 국가에게 거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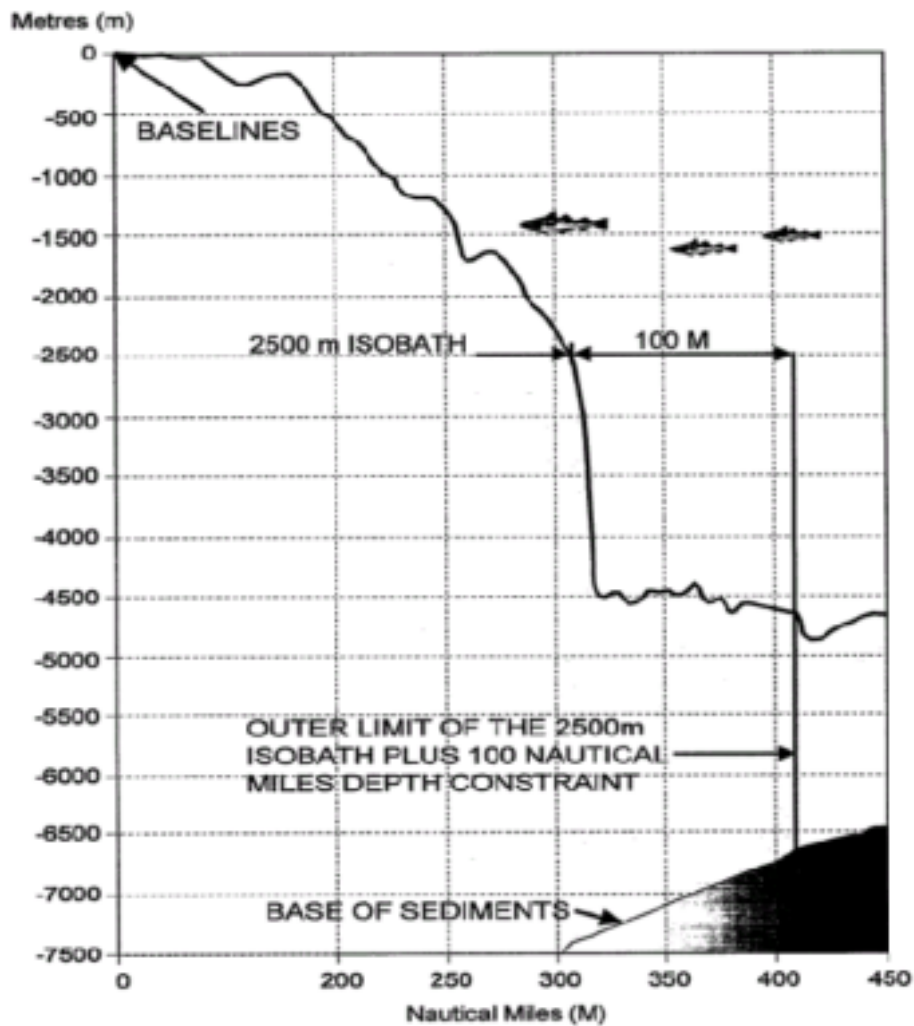
기선에서 350해리 제한 공식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그림 3-4>는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이나 대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제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 2,500미터 등심선 + 100해리 제한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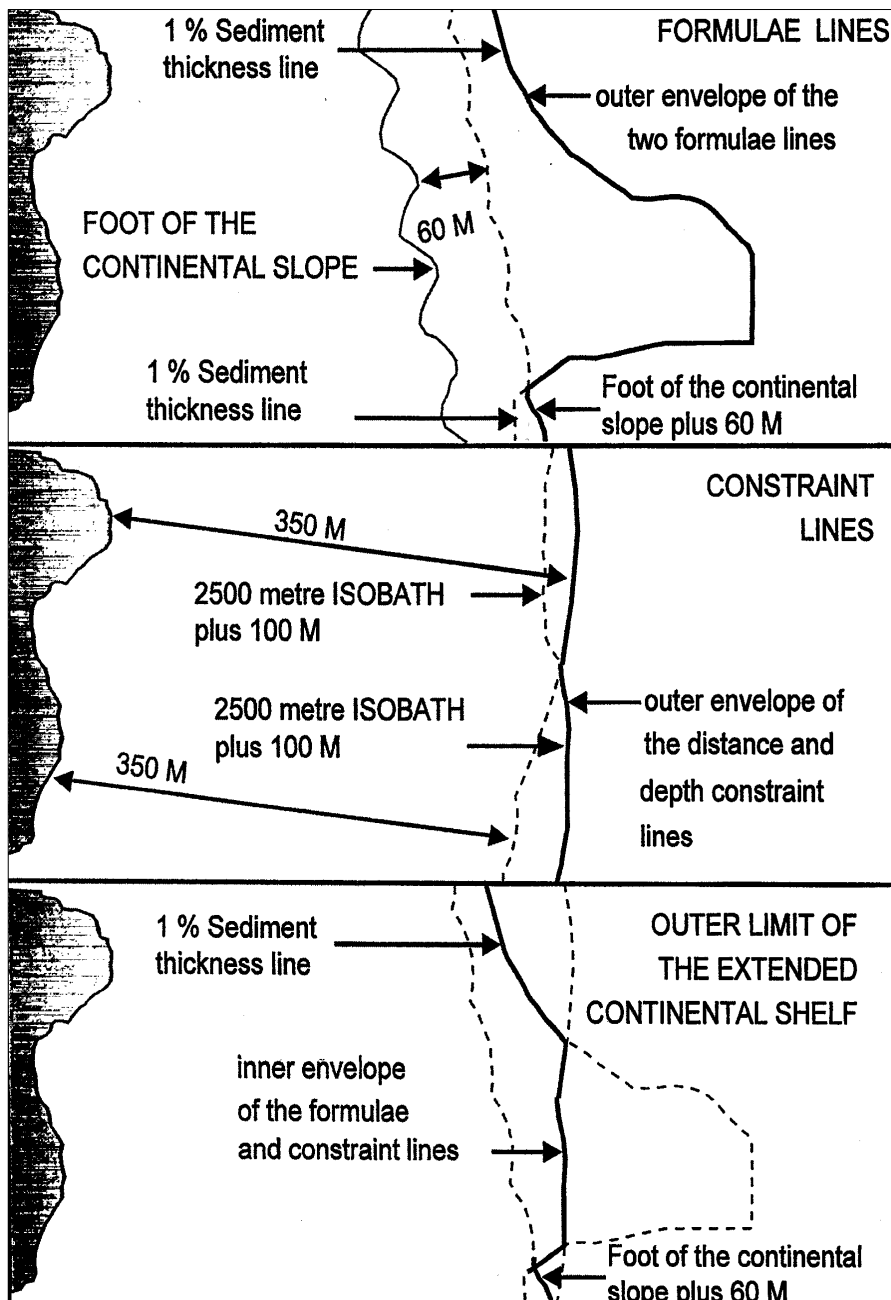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그림 3-5>는 2,500미터 등수심선에서 10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대륙사면단 외측 고정점에서의 퇴적층 두께나 대륙사면단에서 60해리 이내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사용할 경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들에게 외측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그림 3-6>

대륙붕 한계설정 공식선 도해



자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이상에서 설명한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에 관한 기준을 조합한 것이 <그림 3-6>이다.

<그림 3-6>의 상단그림의 상부점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이며 상부실선은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다. 상단그림의 하부점선은 퇴적층 두께가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며 하부실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표시한 것인데, 상단그림 전체의 실선은 두 조건을 조합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나타내는 공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림 3-6>의 중단그림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 또는 2,500미터 등수심선에서 100해리의 고정점으로 획선된 선을 조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단그림의 상부점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 상부실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나타낸 선이며, 중단 하부점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이고 하부실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을 나타낸 것으로, 중단그림의 실선은 2,500미터 등수심선과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조합한 것이다.

<그림 3-6>의 하단그림은 위 상단그림과 중단그림을 조합한 것이다. 하단그림에서 상부의 왼쪽 점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상부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단그림 상부의 오른쪽 점선은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상부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단그림에서 중간 부분의 왼쪽 점선은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기선에서 350해리의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간부분의 오른쪽 점선은 상부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으로 2,500미터 등수심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단그림에서 하부의 외쪽 점선은 퇴적층의 1%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륙사면단으로부터 거리가 60해리인 고정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내는 실선에 의하여 외측한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4. 제출기한 및 절차

1) 제출기한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에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기한은 해양법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내였다.⁵¹⁾ 그러나 제10차 당사국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인 장애 때문에 ‘협약의 발효 후 10년 내’라는 제출기한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제출기한의 연장문제를 재검토하여⁵²⁾ 제11차 당사국회의에서 세이셸의 제안으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⁵³⁾ 제출기한의 연장문제를 검토하였다.

소위원회의 작업결과, 1999년 5월 13일 이전에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1999년 5월 13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이내로 하고,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제출기한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⁵⁴⁾ 이처럼 제출기한의 기산점을 1999년 5월 13일로 한 것은 위원회가 1997년 6월에 비로소 설립되었다는 점과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과학 및 기술 지침이 1999년 5월 13일에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항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국가, 육지영토나 해양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국가가 대륙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제2 부속서 제4조에 의거한 10년의 제출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기간이 늦추어질 수 있다.⁵⁵⁾

2) 제출절차

대륙붕자료의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1) 해양법협약 부속서Ⅱ, 제4조.

52)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t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p.11. in SPLOS/60. in www.un.org/Depts/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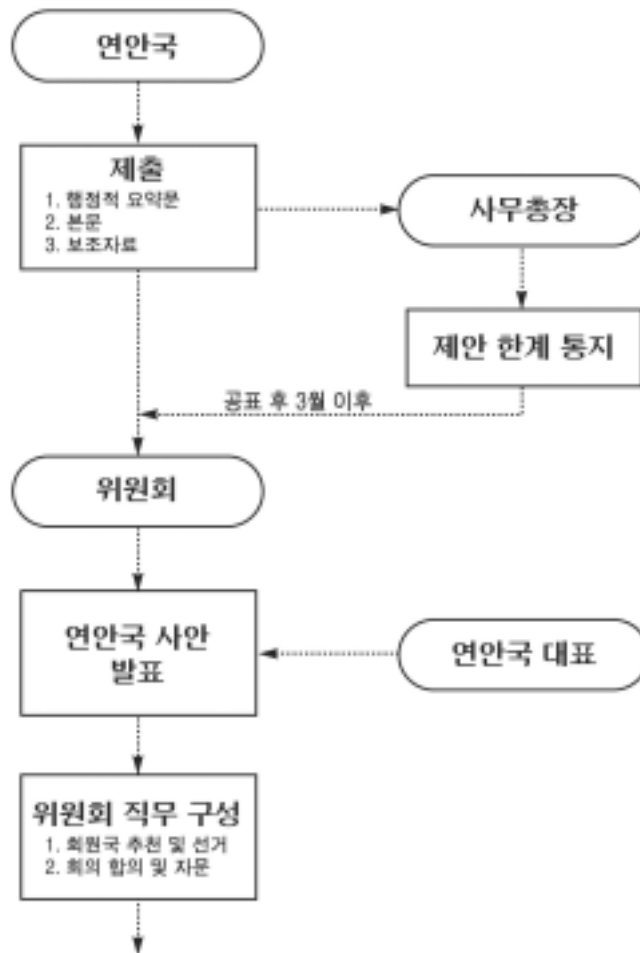
53) SPLOS/66. in www.un.org/Depts/los.

54)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Elev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p.1. in SPLOS/72. in www.un.org/Depts/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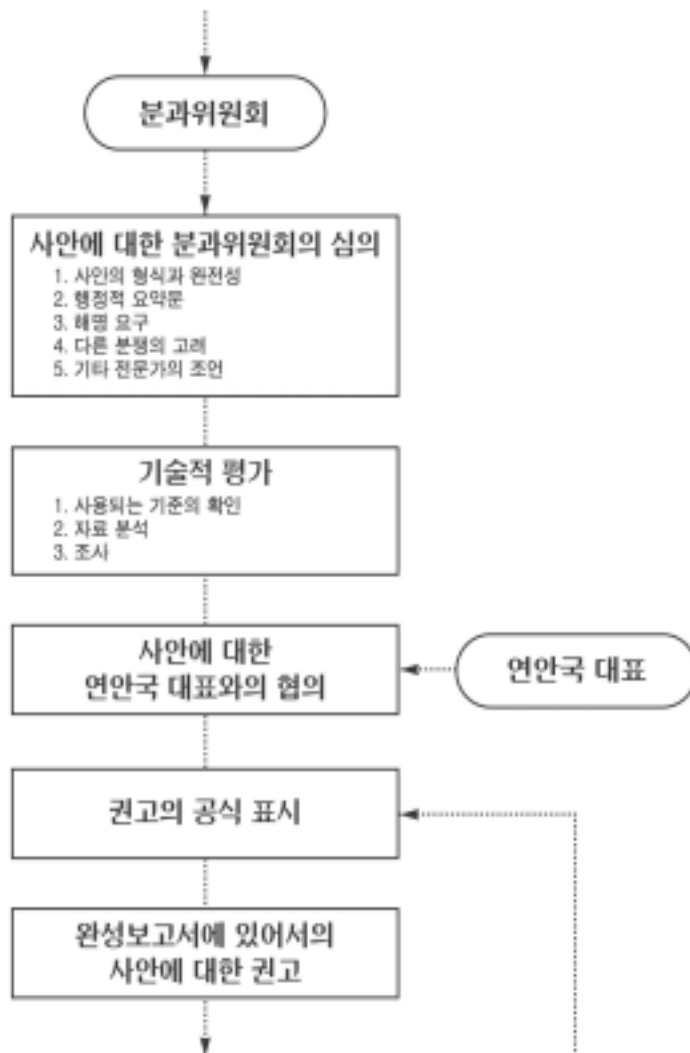
55)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제2 부속서 제3조.

<그림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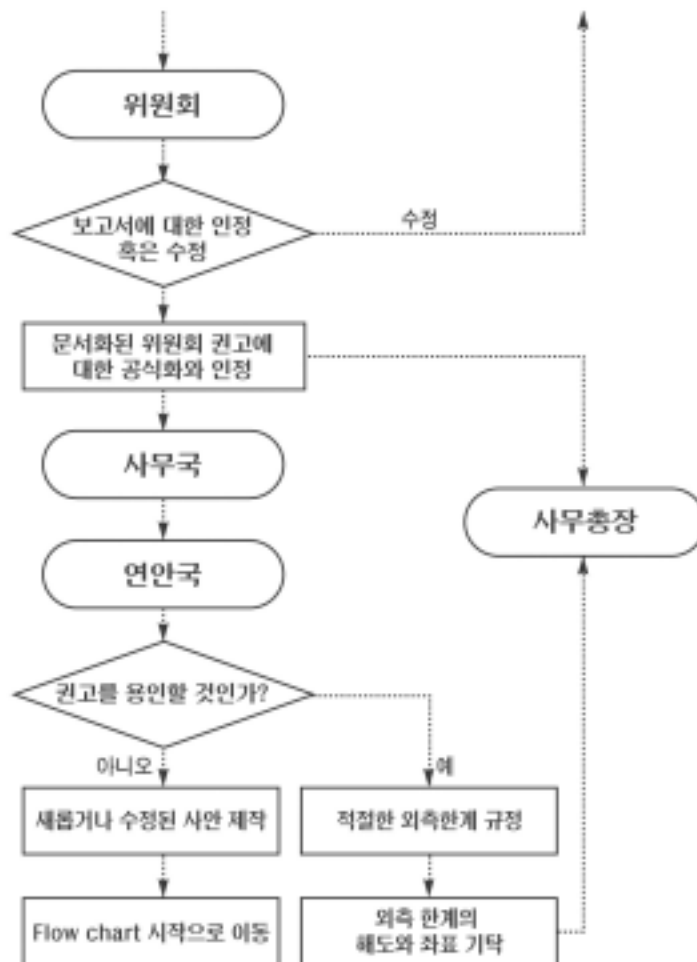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절차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절차(계속)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절차(계속)



자 료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p.19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해양법협약 부속서Ⅱ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연안국의 합법적인 대륙붕의 외측한계로 인정된다.

연안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양법협약 및 제2부속서, 위원회의 절차규칙 및 동 부속서에 근거하고 있다.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형평한 지리적 대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는 대륙붕의 외측한계 확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안국에게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그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행한 대륙붕의 한계는 확정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⁵⁶⁾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외측의 자국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경우에 그 연안국은 그 한계의 상세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조속히, 어떤 경우에도 이 협약의 발효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연안국은 동시에 과학적·기술적 조연을 자국에 제공한 모든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제시하여야 한다.⁵⁷⁾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5월 13일 이전에 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제출기한을 2009년 5월 12일까지로 하고 1999년 5월 13일 이후에 비준한 국가들의 제출기한은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규정이므로 해양법협약의 비준시일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한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항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국가, 육지영토나 해상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국가의 대륙붕자료는 그 제출기간이 늦추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이미 자료를 제출한 국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해당 연안국이 연안 및 대륙붕을 탐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요예산 및 관련 전문인력과 해양탐사기술이 없는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제출기한을 준수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륙붕 외측한계의

56) 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57) 동 협약 부속서 제4조.

설정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관련예산을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제출사례 및 주요국의 동향

1) 제출사례

(1) 러시아

러시아는 2001년 12월 20일에 자국의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의하여 유엔 및 해양법협약의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을 돌리고 2002년 5월에 개최된 제10차 위원회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었다.⁵⁸⁾

러시아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주로 북극해 인근 해역인데, 북극해는 전 세계 대양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대양이다. 북극해의 대부분은 얼음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탐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부 해역이 미국과 러시아 핵잠수함에 의해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 자료의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제10차 위원회 총회에서는 동 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를 하였으며, 2002년 6월에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였다. 동 소위원회는 해양법협약 부속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는 이를 기초로 권고를 하는데,⁵⁹⁾ 러시아의 제출자료는 추후 보완하도록 이를 반려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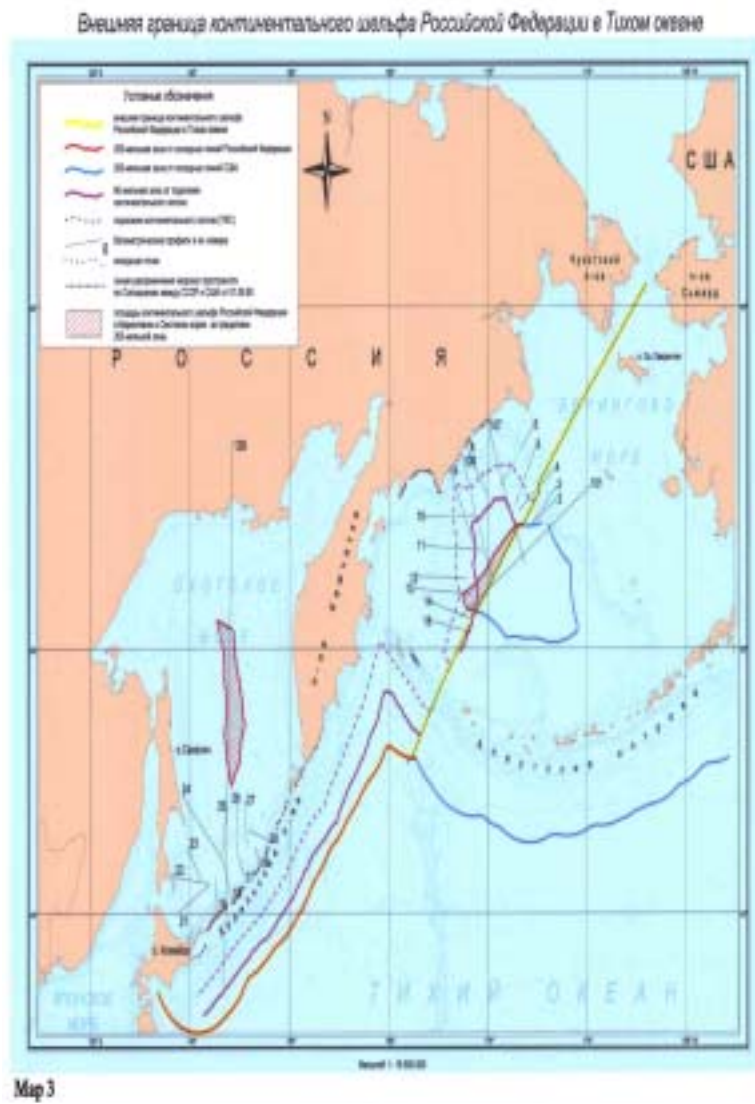
58)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 Submi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p.1. in www.un.org.

59) 해양법협약 제6조

1.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2. 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회 위원의 2/3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위원회의 권고는 제출국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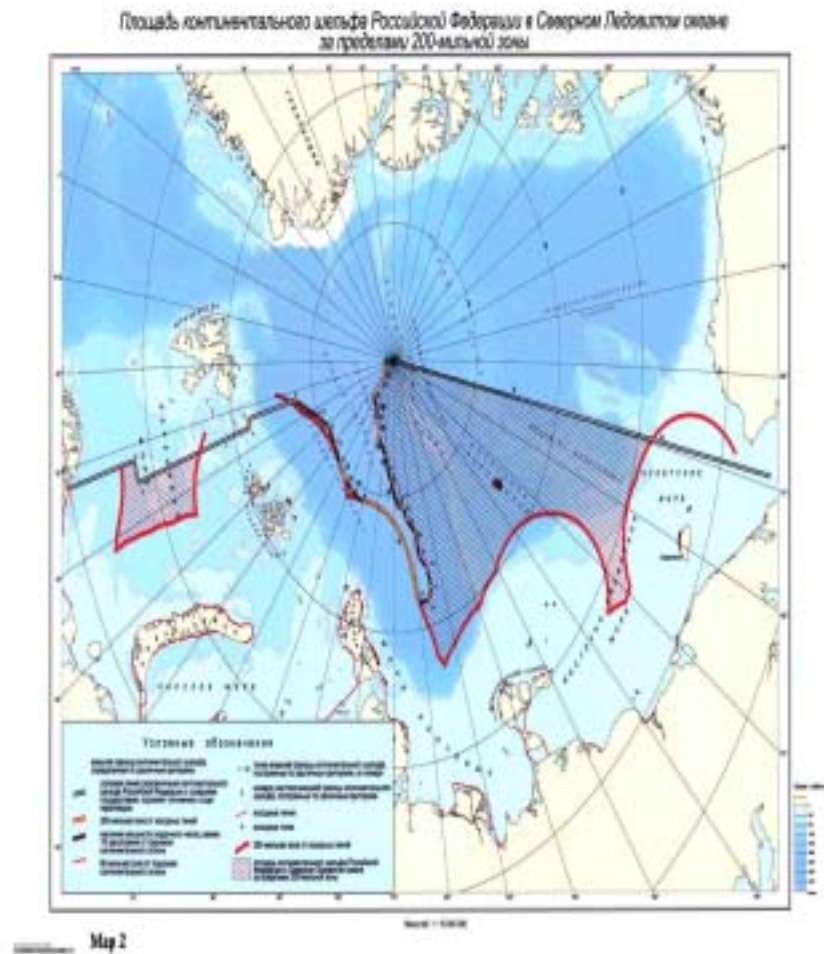
러시아 극동해의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 : CLCS, Submi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26 May 2004.

<그림 3-9>

러시아 북극해의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 : CLCS, Submi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26 May 2004.

러시아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일본은 2002년 2월 26일에 위원회 사무국에 송부한 외교서한에서 러시아의 제출자료 중 북방 4개 도서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고, 해양법협약이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관련규칙을 보더라도 인정하거나 대항하는 국가 간에 미해결이거나 분쟁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경계확선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러시아가 자국의 대륙붕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선언하였다.⁶⁰⁾

미국, 캐나다, 덴마크는 러시아가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이

의 제기 또는 유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은 2002년 2월 28일에 위원회 사무국에 송부한 외교서한에서 해양법당사국회의가 2001년 5월에 채택한 결의를 보면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는 2009년 이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견해로는 대륙붕 외측한계를 측정하는 기선을 정하는 원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가 동 기선의 확정원칙을 먼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베링 해의 해양경계협정에 러시아가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해역에 대한 제출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¹⁾

캐나다는 2002년 1월 24일에 위원회 사무국에 송부한 외교서한에서 러시아의 제출자료 중 북극해의 대륙붕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러시아의 제출자료에 대해 동의나 승인을 할 수 없으며, 동 제출자료는 향후 양국 간 대륙붕 경계확정문제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⁶²⁾

덴마크는 2002년 2월 5일에 위원회 사무국에 송부한 외교서한에서 러시아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동의나 승인을 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행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은 향후 덴마크와 러시아 및 그린랜드와 러시아 간의 대륙붕 경계확정문제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⁶³⁾

(2) 브라질

브라질은 2004년 5월 17일에 자국의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동 자료는 메카도르법에 의해 작도된 1 : 56,000,000 축척 해도 2개와 외측한계에 관한 좌표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대륙붕의

6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Japan: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JPN, 14 March 2002. in www.un.org/los.

6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USA, 18 March 2002. in www.un.org/los.

6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anada: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CAN, 26 February 2002. in www.un.org/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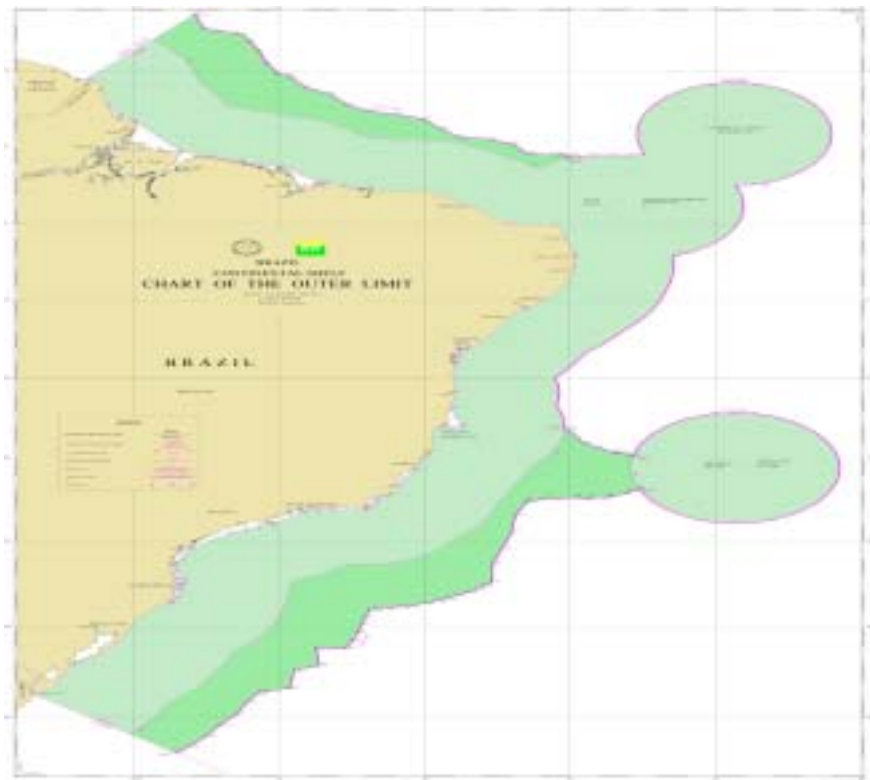
6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mark: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DNK, 26 February 2002. in www.un.org/los.

경사단에서 60해리 이원의 외측선, 대륙붕의 경사단에서 퇴적층의 두께가 1%로 되는 외측선 및 2,500미터 등수심선에서 1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6개의 좌표와 5개의 외측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브라질의 전체 대륙붕 면적은 911,847km²에 이른다.⁶⁴⁾

동 자료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따라 유엔 및 해양법협약의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을 돌리고 2004년 9월 말에 개최될 제14차 위원회 총회에 의제로 채택되어⁶⁵⁾, 협약당사국에게 회람 중에 있다.

<그림 3-10>

브라질의 대륙붕 한계자료



자료 : CLCS, Submission by Brazil, 3 November 2004.

64)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Executive Summary of the submission by Brazil", p.1~2. in www.un.org/los.

65)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 Submission by Brazil, p.1. in [www.un.org/ Depts/los](http://www.un.org/Depts/los).

2) 주요국의 동향

(1) 일본

일본은 1983년부터 해상보안청이 대륙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연장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2009년 5월까지 유엔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⁶⁶⁾ 일본 국교교통성은 일본은 대륙붕에 대해 정부 전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해결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5월까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의 지형과 지질에 관한 데이터 등 한계 연장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는 대륙붕의 한계 연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대륙붕을 탐사하여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주권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토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해역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표 3-3> 일본의 대륙붕 문제에 관한 정책방향

현 황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대륙붕의 확정작업에 대해 정부 전체의 의견일치 필요 ○ 해상보안청의 조사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력,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전체적으로 기본방침 책정, 대처 및 협력 체제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의 판정(대륙성 지각과 해양성 지각의 경계 판정)을 위한 암석 채취에는 불령조사가 필요하나 해상보안청에서는 불령조사가 불가능함. ○ 지각의 판정에는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불가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과의 조직적인 제휴가 필요함.

자료 : http://www.mlit.go.jp/kisha/kisha02/01/010510_3_.html

최근의 일본 의회 중의원 회의에서도 대륙붕에 대한 의원의 질의와 정부 각료의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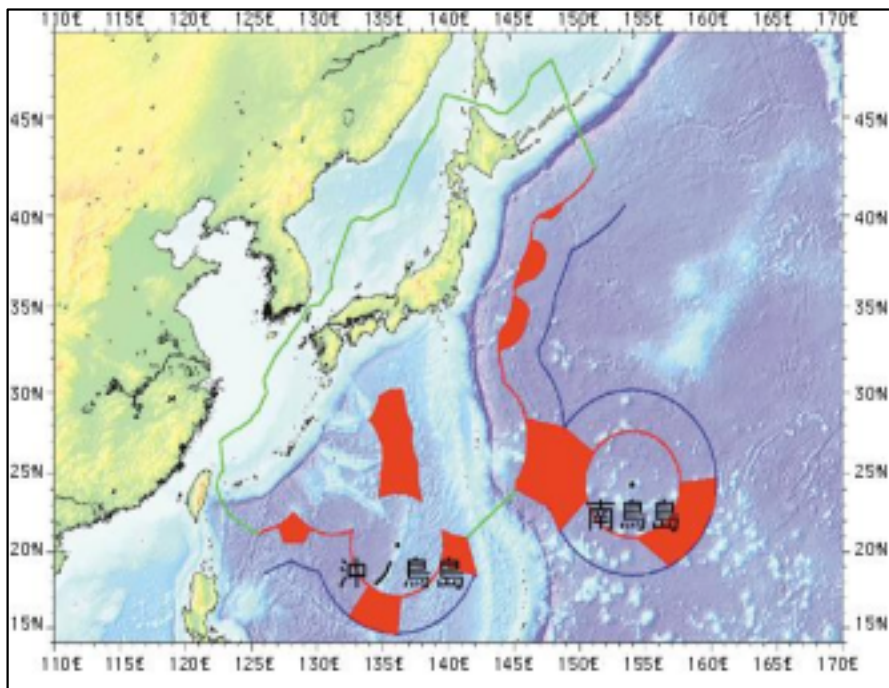
일본 민주당의 오오시이 히사코(大石 尙子) 분과원의 대륙붕 대책에 대한 질

66) 日本 国土交通省 홈페이지(http://www.mlit.go.jp/kisha/kisha02/01/010510_3_.html).

의에 대해 문부과학성 연구개발 국장 사카타 도우이치(坂田 東一)는 2009년까지, 과학적 데이터를 갖추어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데이터를 조사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는 독립 행정법인인 ‘해양연구개발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해 대륙붕을 조사하고 예산은 25억 엔이 계상된 것으로 알려졌다.⁶⁷⁾

일본이 새롭게 자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역은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일본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륙붕



자료 : http://www.mlit.go.jp/kisha/kisha02/01/010510_3_.html

일본에는 대륙붕의 확정 및 조사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2003년 8월, ‘관계부처의 연락 회의’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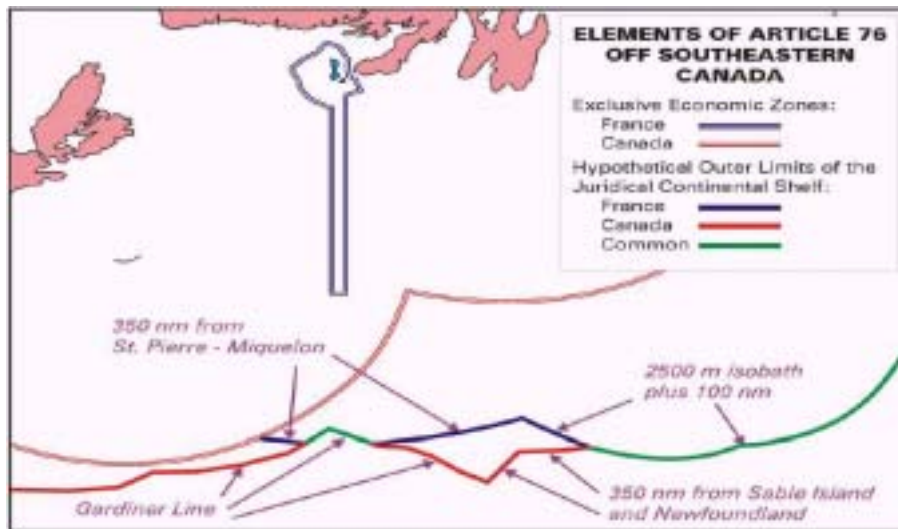
67)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www.shugiin.go.jp).

2004년 8월 6일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열어 올해 시작한 해저자원조사와 지각구조탐사를 2007년 말까지 마치기로 하는 것과 일본의 주변 대륙붕이 일본 영토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2009년 1월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캐나다

캐나다는 2003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남동부해역에 있어서의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연구에 캐나다의 기본입장이 담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12> 캐나다 남동부해역의 대륙붕 한계설정(안)



자료 : CLCS, Information on regarding the submission by Austrlia, 26 May 2004.

본래 캐나다의 남동부해역은 뉴펀들랜드 해안에 가까이 있는 프랑스의 섬인 세인트피에르 및 미켈론(St. Pirre and Miquelon) 인근해역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다.

분쟁 수역의 전체적인 지리적 상황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Cape Breton 섬들이 약 170해리에서 프랑스 연안을 마주보고 있고, 북쪽으로는 Cape Breton 섬들과 뉴질랜드 사이에 Cabot 해협이 있다. 그 옆으로는 뉴펀들랜드 남부 연안이 형성되어 있는데, 생피에르와 미크롱으로부터 약 29해리 떨어져 있다.

양국은 1989년 3월 30일 협정을 체결하여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부탁하였는데, 1992년 6월 10일 판결을 통해 단일 해양경계선을 결정하여 동 섬의 서쪽으로는 24해리를 인정하고 남쪽으로는 영해 밖 188해리의 좁은 통로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가 구상하고 있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중재판결의 내용과는 다르게 세인트피에르 및 미켈론 섬에 대한 프랑스의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3) 호주

호주는 2004년 5월 12일에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외교서한에서, 자국은 2004년 11월 16일까지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 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시간 계획 및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Mr. Michael Bliss를 임명한다고 통보하였다.⁶⁸⁾

(4)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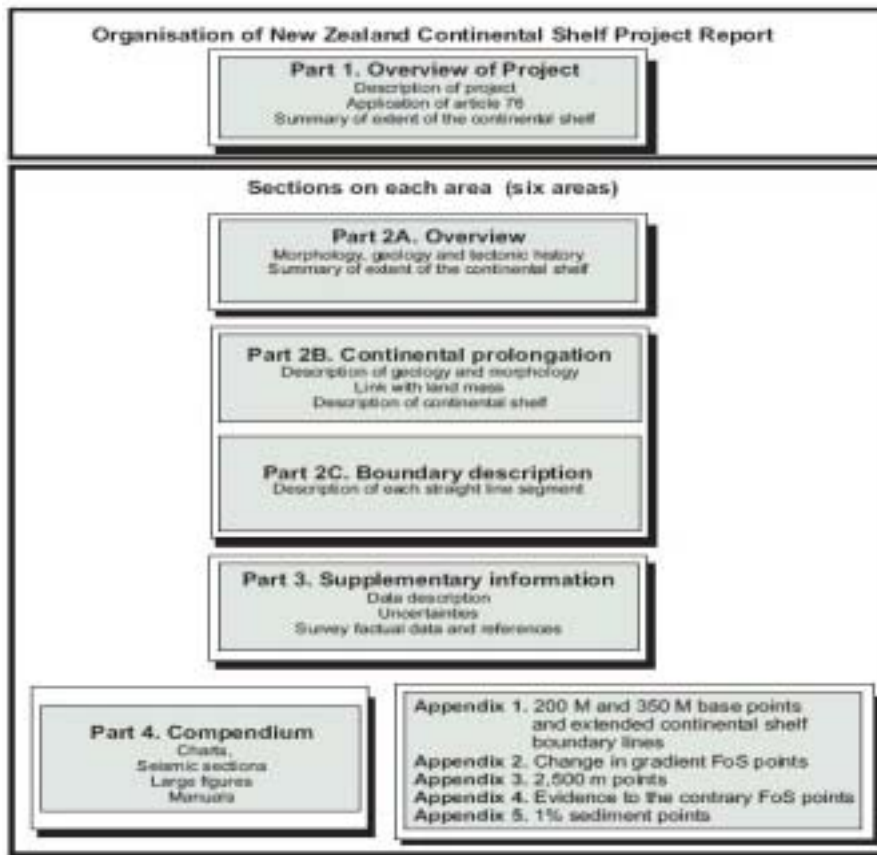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경우도 대륙붕 한계 제출에 대한 준비가 두드러진다.

뉴질랜드의 대륙붕 프로젝트 고문단이 간행한 자료⁶⁹⁾에 의하면, 대륙붕의 한계를 정하는 데 이용되는 데이터를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예컨대, 수심측량에 의한 자료, 진동의 반사 및 굴절에 의한 자료, 위성중력 자료, 천공 자료 등의 과학적 탐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하여도 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68)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by Australia", p.1. in [www.org/Depts/los\(2004. 6. 7\)](http://www.org/Depts/los(2004. 6. 7)).

69) New Zealand Continental Shelf Project Scientific Advisory Group, *New Zealand's Continental Shelf and UNCLOS Article 76*(Institute of Geological & Nuclear Science Information, 2003.), pp. 50~51.

<그림 3-13> 뉴질랜드의 대륙붕 외측한계 보고서의 구성



자료 : New Zealand Continental Shelf Project Scientific Advisory Group, *New Zealand's Continental Shelf and UNCLOS Article 76*(Institute of Geological & Nuclear Science Information, 2003.).

제 4 장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주요쟁점으로
는 어떤 국가에게 제출의무가 있느냐의 문제(법적 구속력), 대륙붕 외측한계의
기준선은 무엇인가(기선문제), 자료제출과 대륙붕의 경계확정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 제출의무의 법적 구속력

1) 제출의무의 근거

해양법협약상 대륙붕한계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
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
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
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
력을 가진다.”

<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4조>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
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그러
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해양법협약 제83조 제1항>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해양법협약은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한계선을 그을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⁷⁰⁾, 이 경우 대륙붕은 원래 연안국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시원적 권원(始原的 權利)’이므로, 연안국이 제출한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 그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나 권고 등은 해당 연안국과 관련국가 간의 해양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¹⁾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는 넘는 경우 연안국은 이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입증자료를 협약 비준 후 10년 이내에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⁷²⁾ 그러나 대항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육지영토나 해양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절차규칙 제1부속서에 의하여 제출한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려는 연안국은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대한 정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륙붕한계위원회와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통지하며, 최소한 3개월이 지난 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외측한계에 대한 정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⁷³⁾

2) 법적 구속력 여부

(1) 해양법협약의 구속력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국가들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원으로는 국제성문법(조약), 국제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부정적 견해도 있음)이 있다.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의무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기 위하여는 앞에

70) 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71) 동조 제10항 및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제45조.

72) 협약 제76조 제8항 및 제2부속서 제4조.

73) 동 의사규칙 제48조 및 제49조, 자료심사운용지침 제1절 및 제2절.

서 본 해양법협약 및 제2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결의나 권고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해양법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그에 구속된다. 해양법협약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의 형태로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자기 의사에 따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법협약이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체결권이 있을 것,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조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조약의 형태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로서 동 협약에 비준하였으므로 협약에 구속되며 그 내용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은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의무를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장하는 경우에 의무지우고 있으며, 협약 부속서에서도 대항국이나 인접국 간의 경계확정에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9조>

“위원회의 행위는 대항국 또는 인접국 간의 경계확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은 “대항국이나 인접국 간의 대륙붕 경계 확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지 않으나 모든 분쟁당사국이 사전에 동의하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⁴⁾

따라서, 한국, 일본 및 중국은 대항하거나 인접하는 국가로서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확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관계국들이 사전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해양법협약상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74) 동규칙 제44조 및 의사규칙 제 I 부속서 제5항(a).

(2)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 권고의 구속력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는 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그 임무는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다.

<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3조>

“위원회의 임무는, (a)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대륙붕의 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76조와 1980년 8월 29일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양해선언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가 행하는 권고의 법적 형식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독특한 구조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국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협력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그 활동의 여지를 유지하려는 필요성 간의 타협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 자체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가 권고의 형태로 정하고 있는 대륙붕외측한계의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더라도 동 위원회가 사법적 사항을 다룰 수 없다. 분쟁의 존재여부 판단은 사법적 사항이므로, 관련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확정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거의 보편적으로 회원국을 갖는 국제기구에서 다수결로 채택된 권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에 대하여 다수의 강력한 요구가 아닐 수 없으며, 동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최소한 국가에 대한 도덕적 차원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될 것이다.

한편, 어떤 국가가 대항국이나 인접국의 대륙붕 경계확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그 자체가 분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대륙붕의 권원이 경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 위원회가 대륙붕의 지질구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사안은 분쟁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시사점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약관계에 관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동 협약에 구속되므로,⁷⁵⁾ 대륙붕의 외측한계 설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둘째, 대항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육지영토나 해양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안국이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제출할 수 있되 그 자료는 관련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한국이 동중국해에서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위원회가 의사규칙에 의하여 한국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대륙붕 외측한계와 측정기선의 문제

1) 대륙붕 측정기준선으로서의 기선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 등 해양관할권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적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low-water line)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⁶⁾ 이 조항은 ‘통상’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기선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안선의 굴곡이 아주 심하거나, 작은 섬이나 암반 및 암초로 둘러싸여 있을 경우 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연안의 해안선이 직선기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채택할 것인가는 연안국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

75) 1969년 조약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76) 동 협약 제5조.

한편, 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의 설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게 설정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고,⁷⁷⁾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low-tide elevations)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직선기선은 간출지까지 또는 간출지로부터 설정될 수 없다.⁷⁸⁾ 또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대륙붕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⁷⁹⁾ 직선기선을 채택하는 연안국은 해도에 이들 기선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⁸⁰⁾는 것 등도 있다.

해양법협약은 영해협약 제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만을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해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만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만의 자연적 입구 사이에 직선을 긋고, 이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경우 만 입구의 안쪽 해역의 면적이 이 반원의 면적보다 커야만 하고, 작을 경우 이는 단순한 연안의 굴곡에 불과하다.⁸¹⁾ 만 입구를 연결하는 직선이 24해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 직선을 직선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24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내에 최대한의 해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24해리의 직선을 긋고, 이 직선을 직선기선으로 사용한다. 또한 만의 입구에 섬이 존재할 경우 만 입구의 길이 중 섬의 길이는 제외한다.

역사적 만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 섬의 존재도 문제가 된다. 해양법협약은 제121조 제3항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대륙붕 및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77) 동 제7조 제3항.

78) 동조 제4항.

79) 동조 제6항.

80) 동 협약 제16조.

81) 동 제10조.

뿐 이와 같은 암석의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활동에 대하여도 구체적 조건이나 내용이 없어 매우 추상적이다.

해양경계에 획정에 있어서 섬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섬의 크기, 육지로부터의 거리, 인구의 수 및 생활조건 등을 관련 고려요소로 보고 있는데,⁸²⁾ 암석의 크기에 관련하여 Hodgson은 암석을 2,590m² 이하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⁸³⁾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 따르면 1백만 m²보다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⁸⁴⁾ 유엔해양법협약은 어떠한 크기를 엄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의 의미도 매우 불명확하다. 첫째 조건인 인간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적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동 조항이 규정하는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통상적 의미로 성실하게 해석한다면 사람의 거주가능이란 상당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의 지속이란 식수, 식량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요를 섬 자체의 자원으로 상당기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⁸⁵⁾ 이 견해에 따르면 식수를 공중수송이나 배관의 설치로 연안에서 공급하는 등 통상적 의미에서 사람이 독자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불모의 암석의 경우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2) 한·일·중의 기선선포 현황

일본의 경우에 1996년에 영해법을 새로 발표하고 163개의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있는데, 만구폐쇄선을 과도하게 적용한 사례, 해안의 복잡성 과잉적용 및

82)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 121조 3항의 해석과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제1호(1996. 5), p.43.

83) R. D. Hodgson, "Islands: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Law of the Sea: Emerging Regime of Oceans*』, 1974, pp.150~151.

84) R. D. Hodgson and R. W. Smith, "The Informal Single Text (Committee II) : a geographical Perspective", 3 *O.D.I.L.*(1976), p.230.

85) 김영구, 「현대해양법론」(1988), p.250.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이탈한 사례, 도서의 존재 및 해안의 복잡성을 과잉 적용한 사례 등 직선기선의 설정이 해양법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1958년 9월 4일 ‘중국영해에 관한 선언’으로 구체적 기점의 제시 없이 대륙연안과 최외곽 도서를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하여 직선기선제도를 이미 채택하였다. 이어서 1992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에도 영해의 폭을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하고 있다. 영해선언에 따르면 대륙연안의 기점과 연안도서의 최외단에 있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구성되는 선이라고 한 반면, 영해법에서는 이웃하는 기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⁸⁶⁾ 이에 대하여 중국은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의 심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⁸⁷⁾

특히, 중국은 1996년 5월 15일 산둥반도 북쪽을 제외한 연안에 직선기선의 채택에 따른 49개의 기점과 Paracel군도(서사, 중사군도) 주변에 적용될 28개의 기점을 발표하였는데, 우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륙연안 기점 1번에서 14번까지이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직선기선이 발표되자 적어도 세 곳의 도서⁸⁸⁾에 대하여 기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중국 측에 통고한 바 있다.⁸⁹⁾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측정기준선(일반적으로는 영해의 기준선)을 확정하는 방법은 연안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기선이 확정되지 않거나 인접국 및 대향국가 간에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및 해양경계확선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대륙붕 외측한계의 자료 제출에 관한 문제가 외측한계의 설정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에만 머물러 있다면, 대륙붕의 측정기준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이익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각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이 매우 곤란하리라고 본다.

86) 김찬규, 「중국의 영해법제정과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 국제문제(1992년 11월호), p.33.

87) 박춘호, 「한반도 주변의 해양어업환경」, 수산계(1993년 1,2월호), p.20.

88) 세 곳의 섬은 Macaiheng, Waikajiao와 Haijiao이다.

89) David Chen, 「Baselines for Territorial Waters」, Window(May 24 1996), p.28.

3. 한·중·일 대륙붕의 지질적 특징

1) 동해의 지질적 특징

동해는 아시아 대륙의 인근 해역이면서 후기 백악기 혹은 팔레오젠 시기에 후열도 확장이 시작되면서 형성된 후열도 분지로 볼 수 있다. 대륙붕의 대륙사면은 제3기 마이오신(Miocene) 이후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한 계단단층에 의해 형성되었다. 동해 대륙붕은 포항 이남 해역에서 일본의 육지까지 접하는 넓은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으나 포항 이북 해역에서는 해안선에 거의 평행하는 좁은 폭(약 25km)의 대륙붕이 형성되어 있다. 그 대륙붕은 급경사의 대륙사면과 접하고 있어 남부에서는 울릉도 분지에 연결되고 북부에서는 한국대륙 연변에 연결된다. 이 연변의 남단에 울릉도와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 울릉도 분지의 최대등심선은 2,000m이고 대륙 연변에서는 1,000m이다.

2) 서해의 지질적 특징

서해는 북쪽으로 발해 만, 한반도 서쪽 연안, 한반도 동남부, 제주도, 33° 17' N까지의 중국대륙 동부연안에 둘러싸여 있다. 즉 북위 33° 17'은 황해와 동지나 해의 경계선이 된다. 서해는 면적이 약 50km²이고 평균수심은 55m이다. 서해 대륙붕은 북단이 중국 본토의 산둥(山東) 반도로 구획되고 남단은 한반도의 남서단과 제주도 서단, 그리고 중국 본토 양쯔 강 남단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획된다.

서해의 평균수심은 약 55m이고 최고수심이 122m이다. 해저면은 전체적으로 평탄한 편이며, 특히 중국 본토 쪽은 황하나 양쯔 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로 매우 평탄한 반면 한반도 쪽은 약간 경사지고 불규칙한 해저면을 보이고 있다.

서해는 황하와 양자 강의 영향으로 두터운 퇴적층을 갖고 있다. 서해 서쪽은 황하와 양자강에서 흘러나온 진흙과 실트(silt)가 깔려 있고 동쪽에는 한강 등에서 나오는 모래가 깔려 있다. 서해의 해저는 서쪽이 평탄한 경사면을 이루고 동쪽은 이보다는 가파르며 다소 불규칙적이고 황토가 연안의 강에서 유입되어 퇴적되어 있는데 동쪽보다는 서쪽이 침수물과 부유물이 많이 있다.

서해의 지질구조를 맨 아래층에서부터 살펴보면, 첫째 지층은 기층(basement)으로 약 1km 이상 묻혀 있는데 모두 중생대 및 그 이전의 화성암, 변성암이다. 그 아래 지층은 퇴적층으로 후기 백악기의 니판[泥板]암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지층은 변형 후 퇴적층으로 한반도와 양쯔 강 입구 사이의 해저구릉에는 퇴적물이 해저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분지는 세 개의 분리된 저지대를 갖고 있다. 그 중 두 곳은 두께 1,400~1,500m의 두터운 퇴적층을 갖고 있으며 하나는 두께 100m 미만의 낮은 퇴적층을 갖고 있다. 가장 낮은 곳은 산둥(山東) 반도 바로 남쪽에 있고 두터운 두 개의 퇴적층은 양쯔 강 삼각주 앞에 있다.

3) 남해의 지질적 특징

남해 대륙붕은 동쪽에서 한반도의 동남단과 일본의 쓰시마 섬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획되며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해협과 제주도 이남 해역으로 구분된다. 제주도 이남 해역은 동지나 해의 북단부에 해당되며 동측에는 오키나와 해구로 구분된다.

동지나 해는 한국, 일본, 중국 연안에 걸쳐있는 반폐쇄해(semi-closed sea)로,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의 설명을 보면 두 개의 상상적 선이 동지나 해의 북부한계선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33° 17'N에서 중국대륙과 제주도에 이르는 선이다. 다른 하나의 선은 제주도에서 일본의 Fukue 섬을 잇는 해역을 말한다.

남해의 수심은 한반도의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해역에서는 육지로부터 점차 깊어져 100m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도 이남 해역에서는 100m에서 200m로 점차 깊어져 200m 등심선이 오키나와 해구의 선변(線邊)에 따라 형성되며 오키나와 해구는 급경사로 이어져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00m에서 1,000m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본토 방향으로서는 완만한 해저면을 보이고 있다.

남해 및 동지나 해의 지리형상학적인 상태를 보면, 한반도나 중국대륙으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수심이 점차 깊어지다가 류큐(琉球) 열도의 앞에 있는 오키나와 해구에 이르러는 급경사를 이룬다. 오키나와 해구의 수심은 최저 2,717m에 이른다.

서해와 동지나 해의 지질구조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1969년 유엔이 주관

한 이 지역의 해저지질구조에 관한 조사결과 이 수역에 석유자원의 부존가능성을 말해 주는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중공, 한국, 일본은 모두 석유자원의 부족을 느끼는 나라들로 석유자원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시사점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3국이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여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한·중·일 3국 간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대륙붕에 대한 권리 주장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선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동 선언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海棚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기심도(其深度)를 불문하고 인접해봉(隣接海棚)에 대한 국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적 선언은 그 주된 목적이 일본어선으로부터 우리의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평화선 선언은 일본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으나, 평화선 선언 중 대륙붕에 관한 사항은 집행되지 않았다. 한국이 대륙붕의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평화선 선언 이후인 1960년 말에 이르러서였다. 그 계기는 1968년 유엔아시아 및 극동 경제위원회(UN ECAFE) 후원 아래서 아시아 근해 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 :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가 구성되어 실시한 황해 및 동중국해의 자원조사 결과가 1969년 긍정적으로 발표된 이후이다. 이에 한국은 1970년 1월 1일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였고, 1970년 5월 30일에는 이 법의 시행령

을 제정하여 광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 절차와 조광권의 양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1971년 5월 6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말부터 동중국해의 석유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70년 초에 한국이 관련법을 정비한 것과는 달리 일본은 체계적으로 국내법령을 정비하여 대륙붕광구를 지정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것은 일본이 대륙붕 개념의 형성과정에서 대륙붕 제도가 정착성 어족자원을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면서 제네바 대륙붕협약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대륙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0년대 말에 일본의 4개 석유회사들이 동중국해에 4개의 광구를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일본은 이와 같이 석유회사들이 구획한 광구를 인정하고 거기에 시추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대륙붕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 왔다.

중국의 경우에도 1970년에 한국, 일본, 대만이 대륙붕 개발에 관심을 보이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이때 공식적인 법률을 통해 대륙붕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1982년에 중국은 국무원령으로서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해안 석유 개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고, 1992년도에는 서해와 동중국해에 북광구와 남광구를 설정하였다. 이중 북광구는 한국의 제4광구와 일부 중복되어 한국과의 마찰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기 자국의 관계법률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2항에서 “대한민국과 대항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함) 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설정된 해저광구를 육지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서 제7광구의 남단을 오키나와 해구까지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및 제2조(대륙붕 경계선)에서 모두 중간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다소 복잡한 서술방식으로 중간선을 기초로 하는 자국의 대륙붕경계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200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합의된 중간선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에는 그 선 및 이것과 접속하여 그어지는 정령(政令)으로 규정하는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함)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제법의 기초 위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중국은 자국 대륙붕의 권원과 관련하여 동 법률 제2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연장으로서 대륙변계의 외측에까지 이르는 해저구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라고 규정함으로써 육지의 자연연장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확대함에 따라 각국의 주장하는 관할해역의 중복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대륙붕을 포함한 해양경계획정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1945년 Truman의 대륙붕선언이 있는 후, 대항국이나 인접국 사이의 해양관할구역의 경계획정 문제는 국제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정치적 사회문제 제로 대두되었다. 해양법협약상의 대륙붕의 범위는 최소 200해리이며, 대륙변계가 연장될 경우에는 350해리까지 또는 특수한 경우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가 간의 분쟁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해결도 어렵다.

결국, 해양법협약 규정에 의한 경계획정기준은 대륙붕협약의 중간선 원칙이나 등거리 원칙보다 모호해졌으며, 막연하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열거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은 결국 법원칙의 부재(不在)를 의미한다. 또한 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해양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을 각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찾고, 관할권제도의 혁신적 변화에 따라 각국이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원칙을 도출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행해진 국제법정의 판결이 각 사건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서 일반원칙을 도출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4. 한·중·일 대륙붕의 경계확정 문제

1) 한·중 간 서해의 대륙붕 경계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4호로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5월 30일 대통령령 제5020호로써 동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붕의 개발구역으로서 7개 해저광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제1, 제3, 제4광구는 중국과 마주보는 황해에 있고 제7광구는 한, 일, 중 3개국이 마주 보는 동중국해에 있다.

해저광구를 지정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고 실제 획선(劃線)에 있어서는 중간선보다 우리 쪽으로 약간 들어오게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해저광물자원에 관한 탐사에 나서자 중국 측은 1973년 3월 15일,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불법적으로 외국 회사를 끌어들여 자기들의 해저자원을 탈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하고 나섰다.

첫째, 황해 및 동중국해의 광대한 해저가 황하와 양쯔 강에서 흘러내린 점토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곳이 자국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 둘째, 1958년 9월 4일의 자기들의 영해선언 때 채택한 직선기선 제도에 입각하여 한국이 그은 중간선은 참다운 중간선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 셋째, 그때까지 실시된 모든 해저탐사에 자기들이 참여한 바 없으므로 자기들이 참가하지 않은 탐사와 그에 따른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 넷째,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전제로 거기서부터의 중간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황하와 양쯔 강에서는 끊임없이 황토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특히 황하에서는 매년 1백 50억 입방야드의 황토가 유출되며, 이로 말미암아 본래 섬에 불과했

던 현재의 산둥(山東) 반도가 대륙과 육속(陸續)되었다고 한다.

황해의 등심선(等深線)은 황해를 3등분할 때, 3분의 2가 중국으로 가고 3분의 1이 한국으로 가는 바로 그 위치에 있다. 이를 두고 황해의 등심선이 그렇게 된 것은 황하에서 흘러나온 황토 때문이며 황해해저의 3분의 2에 중국에서 흘러나온 점토층이 쌓여 있으니 황해해저의 3분의 2는 중국의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착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대륙붕이란 연안국 육지영역의 자연적 연장이기에 연안국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흘러나온 황토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곳이 중국의 대륙붕이라고 보는 견해는 대륙붕의 법리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중·일 간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

동중국해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이 중첩되어 있는데 동중국해에서 서로 마주보는 가장 가까운 연안의 폭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중국해 수역은 모두 경계획정의 대상수역이 된다.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륙붕 경계와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과의 관계, 오키나와 해구 존재의 경계획정에 반영 여부 및 3국 간의 해양경계 획정에서 반드시 논의되는 접합지점(Tri-junction)의 도출 문제 등이다.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육지의 자연연장이론에 근거하여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를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3) 한·일 간 대륙붕공동개발협정

한국과 일본 간에는 향후 400해리 미만 수역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육지의 자연연장 개념과 같은 지형적 요소가 고려되어지는 것인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200해리 이원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권원이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단일경계로 확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활발한 탐사 및 개발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석유 탐사선이 1974년 한일간에 설립된 남부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4년 당시 한국과 일본이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을 때 중국측은 이 한일 양자 간의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일본마저 한일 간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일본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일 간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항구적인 경계획정협정이 아니라, 5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만 유효한 한시적인 협정으로서 2028년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통고에 의하여 종료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4) 시사점

동중국해에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해양경계 확정문제가 대두하게 되어 있는데,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는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 그곳까지 연결되는 반면에 일본의 자연적 연장은 단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오키나와 해구가 동중국해 해저지형의 근본적인 단절을 구성할 경우에는 동중국해 해양경계 획정에서 고려되어야 주요 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나,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관련요소는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조항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규범의 내용이 같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대륙붕의 경계선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이 같다는 것을 암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륙붕과 관련하여 형평한 경계선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

선으로서는 형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오히려 서로 다른 경계선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한일 간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육지의 자연적 연장설’보다는 ‘거리 기준’이 더욱 우세해진 추세를 보고서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차 일본이 한일 간 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연장하는 데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단일경계를 획정한 사건은 미국과 캐나다 간 메인만 사건,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얀 메이안(Jan Mayen)사건,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 획정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서 단일경계를 획정한 것은 법률적인 의무나 권고 때문은 아니었으며, 해당 사건의 당사국들이 단일경계선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제 5 장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제출에 관한 대응방안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준비체제 구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안국의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대륙붕외측한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이익의 득실을 따져 그 제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륙붕과 관련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준비체제를 공고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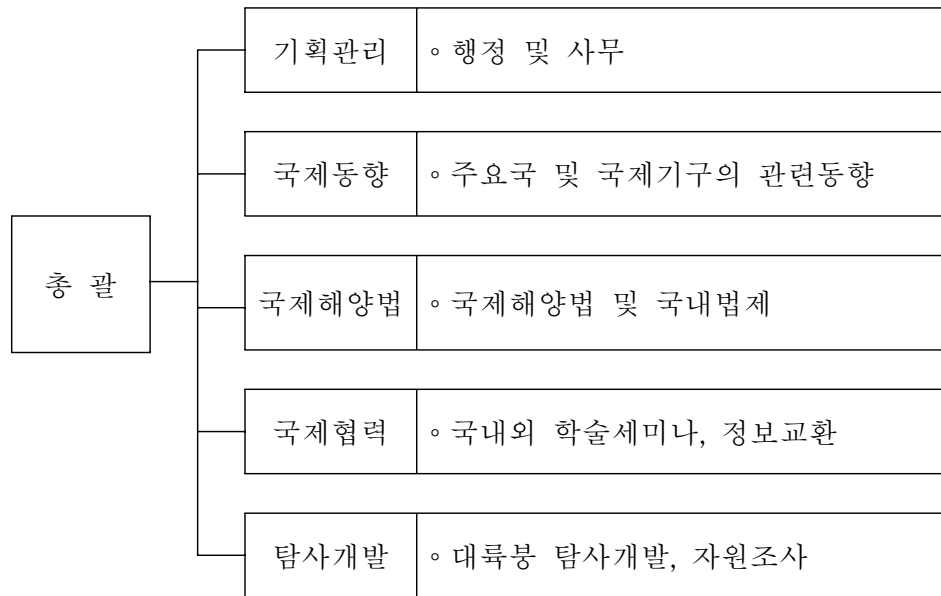
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설치

‘대륙붕한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륙붕의 외측한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예산 및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조직화된 추진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법, 해양지리 및 지질학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대륙붕한계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동향의 분석 및 국제법상의 문제점 연구 등을 통하여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직속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국제해양법, 해양지질학, 해양자원학, 해양정책학, 수로학 등의 학계전문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연구기관의 관련전문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및 산업자원부 등 행정부처의 담당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5-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관련동향에 관한 국제동향, 국제해양법 및 국내법제를 담당하는 해양법제,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협력, 대륙붕의 탐사개발 및 자원조사에 관한 탐사개발 등에 관한 실무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자료분석 등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세부실천방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매체 등 기고 및 인터뷰, 홍보물 제작, 기자간담회,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대책을 홍보한다.

2) 학제 간 연구체제 구축

지속적인 학제 간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륙붕의 외측한계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학제 간의 공동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

에서 말한 ‘대륙붕한계위원회(가칭)’가 설치되는 경우에 그 주된 기능을 대륙붕과 관련된 연구에 두고, 기초자료의 수집 정리, 지질조사 및 자원조사, 국제동향의 분석, 관련 해양법 쟁점연구 등의 연구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칭)’가 조속히 설치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여 매월 또는 격월에 걸쳐서 관련문제에 관한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연구체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륙붕의 탐사, 개발에 관한 정보를 관계자들 간에 교환하고 관련정보를 수집, 유지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륙붕의 탐사, 개발을 지속해왔고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그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계자들 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이 미흡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륙붕의 탐사, 개발자료나 관련정보는 일차적으로 사업수행기관에서 유지·관리하되, 일정 기간(예컨대, 5년)이 경과하면 국립문서보관소에 이를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륙붕법’의 제정

1) 관련 국내법령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영해를 3해리로 규정하였는데(군정법령 제189호 제3조 제2항), 이어 한국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이를 한국 국내법령으로 존속시켰다. 이후 1977년 12월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12해리의 영해를 채택·공포하였다. 1978년 9월 그 시행령을 공포·발효시켰으며 1995년 개정을 통해 24해리의 접속수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 12월 18일에는 동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일정 기준 이상의 배출량에 한정하도록 했다. 또한 영해 폭의 측정시에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을 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용하던 좌표체계인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 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자연적인 퇴적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점을 설정하였다.

현재 한국 ‘영해및접속수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인접 또는 대항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대항하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2) 배타적경제수역법

한편, 한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동년 8월 8일 ‘배타적경제수역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과 대항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확정한다.

제3조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등)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 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한국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개발에 관한 권리를 분명히 하였다. 이 법 제3조에 근거하여 7개의 해저광구를 설치하였다.

한국이 7개 구역의 해저광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그 대륙붕 관할범위를 명시한 근거는, 서해 4개 광구의 서쪽 경계선은 중국 본토와의 중간선을, 쓰시마 섬 북동수역 제6광구의 경계도 일본과의 중간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석유 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주도 남부 동중국해의 제7광구는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설에 근거하여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로 단절된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속된 대륙붕으로 보아 마라도에서 280해리에 이르는 해역을 범위로 하고 있다.

(4) 한·일 대륙붕협정

한국과 일본은 서로 중복되는 대륙붕에 대하여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해협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선 원칙을 택한 이 경계선은 후에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일부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간주수역을 분할하는 경계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다. 제5광구 일부수역과 제7광구 전체를 포함하는 해역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주장이 중복되는 동중국해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유효기간은 50년으로 2028년에 종료하게 된다.

2) 일본과 중국의 현황

(1) 일본

일본은 1996년 발효된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자연연장으로서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고 대륙붕의 범위를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라고 주장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를 동일시하고 있다.

일본이 대륙붕 한계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접합지점(Tri-Junction)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인도와 일본의 조도와 남너군도 및 중국의 동도와 동남초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 제7광구는 일본으로 귀속되며, 제5광구와 제6광구의 일부도 일본에 속하는 결과가 된다.

(2) 중국

1998년 6월에 발효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중화인민공화국 육지영토의 전부가 중국영해 밖으로 자연 연장되어 대륙변계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구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안을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중국의 지리적 요건에 유리하게 대륙붕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의 제4광구와 제7광구의 상당부분이 중국의 대륙붕에 속하는 결과가 된다.

3) ‘대륙붕법’의 제정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에 비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은 배타적경제수역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륙붕도 배타적경제수역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당시 1970년의 해저광물자원법에 의거한 7개 광구의 설치와 이에 따른 일본과의 2개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명문조항을 두지 않았다.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에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대륙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배타적경제수역 외에 제7광구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하지 주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즉,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3조 제1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이나 중국과의 대륙붕협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서도 해저자원을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다양한 해저자원개발에 법적 근거를 앞으로 제정될 ‘대륙붕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대륙붕 탐사개발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국내대륙붕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탐사위주로 진행됨으로써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개발을 전제로 하여 80년대에 제·개정된 법률이 많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사업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륙붕의 탐사 및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탐사, 개발에 관한 관련한 주요법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석유사업법’인데,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04년 7월에는 ‘석유개발사업의 융자기준’을 공고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비용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는 석유개발 성공시 상환될 융자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을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

정되어야 한다. 석유개발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석유개발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재원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석유개발사업 성공으로 발생한 용자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이 석유개발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법 제6조(용자 및 유가완충계정의 세입, 세출)규정에 단서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단서조항에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은 익년도 투자 계정의 세입 예산으로 전환하여 석유개발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표 5-1>

석유개발사업의 용자조건

구분	용 자 비 율	용 자 기 간	이 자 율
탐사사업	탐사사업비의 80% 이내 (공사는 100% 이내)	①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하되 용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용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한다. ②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① 용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따른다. ②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개발사업	개발사업비의 70% 이내 (공사는 100% 이내)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용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용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
생산유전참여사업	생산유전참여사업비의 70% 이내 (공사는 100% 이내)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용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용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
생산유전운영사업	공사의 생산유전운영사업비중 부족액의 100% 이내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용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용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

자료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8호(2004년 7월 23일).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를 망라한 해저자원개발사업의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조광료 부과기준을 개발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국내 대륙붕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탐사가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대륙붕 개발사업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현행 관련법상 해외투자자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며, 대륙붕 개발 현실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광료율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금리수준의 변동이나 투자여건에 따라 용자조건의 신축성 있는 운용 등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륙붕의 과학조사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조광료, 법인세 및 의무탐사량 완화 등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우리나라가 대륙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해저광물을 석유 및 가스에 제한하고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시한 생물 및 무생물자원 개발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수준으로 대륙붕 개발에 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표 5-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조광료 부과기준

구 분	생산량	부과요율(%)
원 유	2 이상 ~ 5 미만(천배럴/일)	3
	5 이상 ~ 10 미만(천배럴/일)	6
	10 이상 ~ 30 미만(천배럴/일)	9
	30 이상(천배럴/일)	12
천연가스	1 이상 ~ 3 미만(백만 m ³ /일)	3
	3 이상 ~ 6 미만(백만 m ³ /일)	6
	6 이상 ~ 11 미만(백만 m ³ /일)	9
	11 이상(백만 m ³ /일)	12

자료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별표 2], (2003. 6. 5, 신설).

3) 석유사업법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부과 사유인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 외에 석유개발을 위해서도 부과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중 일부를 석유개발산업 육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에 석유개발에 관한 정의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석유개발을 위한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석유 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부과 사유에 추가로 석유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은 강제적 징수의 성격을 갖는 준조세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금 징수사유로 석유개발을 추가하여 규정해야 한다.

석유개발을 부과금 징수사유로 추가할 경우 과세요건 명확주의 요건상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에 석유개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하며 석유개발사업을 위해 예산 배정이 예특회계 인정될 경우 예산배정 및 집행에 대한 다툼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부과금 부과기준에 있어서 석유개발을 위한 별도의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또한 동 부과금은 석유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동부과감이 예특회계 예산의 세입 예산으로 흡수되더라도 타 용도사업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동북아 해양협력체의 구성·운영

1) 필요성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한·중·일 3국이 관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때는 1968년 말 유엔의 극동아시아경제위원회(ECAFE :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 Far East)가 아시아 해역광물자원공동탐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탐사한 후 1969년 소위 Emery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각 연안국들은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륙붕 수역에 대하

여 자국의 관할권을 설정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대만, 일본이 각각 일방적으로 주장한 해저광구는 17개에 달했으며 이중 13개 광구가 중복되고 있으며, 중국은 육지의 자연연장설을 주장하여 서해 대륙붕의 대부분이 자국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중국해는 석유 및 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1970년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그 시행령으로 제7광구를 설정한 곳이다. 동지나 해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까지도 각각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가장 치열한 경계논쟁이 되어 왔는데,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제정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동지나 해의 어태열서(魚台列嶼)나 남지나 해의 동사군도(東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 중사군도(中沙群島), 남사군도(南沙群島)가 중국령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개연성이 가장 많은 지점이 바로 서해이다.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2004년 7월 “한국이 군산에서 직선거리로 250여km 떨어진 ‘서해 2광구’ 일대에서 석유탐사를 시작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7월 초부터 전국 군산시 앞바다 ‘서해 2광구’ 일대 300km에서 석유 물리 탐사활동을 벌인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계국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 대륙붕의 탐사·개발과 관련된 민간 차원(예컨대, 한국의 석유공사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서 대륙붕을 공동으로 탐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추진방안

단기적으로는 한국, 일본 및 중국이 대륙붕의 탐사에 있어서 상호 통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해, 남해,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 한국, 일본 및 중국은 한·일·중 간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과학조사를 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상호 통보만으로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한·일·중 3개국 간의 해양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륙붕의 탐사, 개발을

포함하는 거시적 차원의 ‘동북아 해양협력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양환경문제에 관하여는 해양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한국, 일본 및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로 한·중 황해환경 공동조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철새조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한·중 서해환경 공동조사는 1993년 11월 체결된 한·중 환경협정에 따라 1996년에 한·중 서해환경 공동조사추진을 한·중 양국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 첫 공동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서해를 보전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은 UNEP(유엔환경기구)주관으로 구성된 지역해 보전을 위한 다자 간 환경협력기구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사업으로, 철새의 번식지 및 이동경로로 생각되는 동북아지역의 철새의 루트 등을 조사하여 철새의 이동경로, 수명, 번식 개시 연령 등을 해명하기 위해서 표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일본, 중국 등 관계국들로 구성된 동북아 해양협력체를 만들어 대륙붕자원의 공동개발,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활한 추진 등 공존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어

2001년에 개최된 제11차 해양법당사국회의는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기간을 1999년 5월 13일부터 10년 내로 하고 구체적인 기술지침을 수립함으로써 각국에 대하여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은 비연안국이나 비협약당사국은 제출의무가 없으며, 대항하거나 인접하는 국가 간에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육지영토나 해양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제출의무가 강제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제출기한에 대하여도 1999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비준한 국가와 그 이후에 비준한 국가들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달리하고 대륙붕의 경계분쟁이 있는 국가나 해양경계 획정 중에 있는 국가의 제출기한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해양탐사능력이 없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그 측정기준선인 연안국의 기선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대륙붕 외측한계의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가 외측한계의 설정에 관한 기술적인 논의에만 머물러 있다면, 대륙붕의 측정기준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이의 제기가 끊이질 않을 것이므로 각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이 매우 곤란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이나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우리나라는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과 관련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대륙붕 길이가 400해리를 초과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 제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은 국가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중대사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투입하고 연구조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대통령(또는 국무총리나 해

양수산부 장관) 직속의 ‘대륙붕위원회’를 시급히 설치·운영하여 국제해양법, 지질학, 해양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대륙붕 외측한계 제출의무와 관련한 우리의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동해, 동중국해 및 황해에서 해양퇴적층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사업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륙붕의 탐사 및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하여 자료국제해양법, 지질학, 해양학 등 학제 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즉, 중국이나 일본의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제출에 관한 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 간에 주장이 중복되는 동중국해의 접합지점(Tri-junction) 부근에서 석유나 가스의 부존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륙붕 한계자료의 제출시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칫 먼저 제출하는 국가가 자료의 누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륙붕법’을 제정하여 향후 일본이나 중국과의 대륙붕협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서도 해저자원을 석유와 가스로만 한정하고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다양한 해저자원개발의 법적 근거를 앞으로 제정될 ‘대륙붕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륙붕 탐사, 개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탐사, 개발에 관한 관련한 주요법령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석유사업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동북아 해양협력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일본과 중국은 해양조사선을 동원하여 대륙붕의 석유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륙붕의 탐사, 개발과 관련하여 수차례 마찰이 발생한 바 있으며 탐사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춘샤오(春曉) 가스전을 개발 중이며 텐와이텐(天外天), 뚫차오(斷橋), 잔취(殘雪) 등 4개의 가스전 개발이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약 2,400km²의 3차원 물리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에 가스전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륙붕 자원을 둘러싼 논쟁이 국가 간의 분쟁으로 변지지 않도록 한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로 구성된 동북아 해양협력체를 만들어 대륙붕자원의 공동개발,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활한 추진 등 공존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김대순,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2004.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과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제1호, 1996.

_____,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김은수, “한국과 일본 간 남부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2호, 1999.

김찬규, “중국의 영해법제정과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 「국제문제」 11월호, 1992.

_____, “한반도 주변의 분쟁요인에 관한 고찰”, 「평화연구」, 제2권 제1호, 1983.

_____, “황해의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 「아태연구」, 제1권 제1호, 1994.

김태천, “유엔총회결의의 법적 성질”, 法曹, 1992.

나인균,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일방적 행위”, 「성균관법학」, 제13권 제1호, 2001.

박춘호, “한반도 주변의 해양어업환경”, 수산계(1993년 1, 2월호).

_____, 「동아시아와 해양법」, 국제해양법학회, 2000.

_____, “한국의 대륙붕 경계문제”, 「고려대법학논집」, 제21집, 1983.

_____,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해양정책연구」 제9권 제2호, 1994.

백진현,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변천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계문제”,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1991.

오윤경 외 21인, 「현대국제법」, 성지사, 2000.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판, 일조각, 2003.

이석용, 「국제법」, 3정판, 세창출판사, 2003.

이창위, “일본의 해양법정책”,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2호, 1993.

최진용·박용안, “한반도 대륙붕 퇴적물의 분포와 조직특성”, 「해양개발연구소 논문집」, 제1호, 1993.

〈국외자료〉

- David Chen, "Baselines for Territorial Waters", *Window*(May 24 1996).
-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larendon Press, Oxford, 1982.
- Ian Brownlie,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0.
- Jonathan I. Charney,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R. D. Hodgson, "Islands: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Law of the Sea: Emerging Regime of Oceans*, 1974.
- R. D. Hodgson and R. W. Smith, "The Informal Single Text(Committee II) : a geographical Perspective", 3 *O.D.I.L.*(1976).
- Re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Longman Group UK Limited, 1992.
- Ying Wang and David Aubre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a coastline", *Continental Shelf Research*, Vol.7, No.4, 1988.
- New Zealand Continental Shelf Project Scientific Advisory Group, *New Zealand's Continental Shelf and UNCLOS Article 76*, Institute of Geological & Nuclear Science Information, 2003.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11*, 13 May 1999.
-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 Submi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p.1.
-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Executive Summary of the submission by Brazil", p.1~2.
-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 Submission by Brazil", p.1.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Submissions to the Commission :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by Australia", p.1.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t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SPLOS/60.

Meeting of States parties, *Report of the Elev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SPLOS/72.

Rules of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3/Rev.3).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13 May 1999 at its fifth session. in *CLCS/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USA, 18 March 200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anada: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CAN, 26 February 200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mark: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DNK, 26 February 200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Japan: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01.2001.LOS/JPN, 14 March 2002.

부록 1 : 각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2004년 6월 현재)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륙 봉 (nm)	협약비준
아프가니스탄	-	-	-	-	-	
오스트레일리아	12	24	200		200	1994. 10. 05.
바레인	12	24				1985. 09. 30.
방글라데시	12	18	200		CM	2001. 07. 27.
브루나이	12		200			1996. 11. 05.
부탄	-	-	-	-	-	
콜롬비아	12	24	200		200	
중국	12	24	200		200	1996. 06. 07.
쿡아일랜드	12		200		200	1995. 02. 15.
사이프러스	12				Exp	1988. 12.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		200			
피지	12		200		200	1982. 12. 10.
인도	12	24	200		200/CM	1995. 06. 29.
인도네시아			200			1986. 05. 03.
이란	12	24	협정선		협정선	
이라크	12					1985. 07. 30.
이스라엘	12				Exp	
일본	3/12	24	200		200/CM	1996. 06. 20.
요르단	3					1995. 11. 27.
카자흐스탄	-	-	-	-	-	
키리바티	12		200			2003. 02. 24.
쿠웨이트	12				협정선	1986. 05. 02.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룩 봉 (nm)	협약비준
키르기즈스탄	-	-	-	-	-	
라오스	-	-	-	-	-	1998. 06. 05.
레바논	12					1995. 01. 05.
말레이시아	12		200		200/Exp	1996. 10. 11.
몰디브	12		경·위도			2000. 09. 07.
마셜군도	12	24	200			1991. 08. 09.
미크로네시아	12		200			1991. 04. 29.
몽고	-	-	-	-	-	1996. 08. 13.
미얀마	12	24	200		200/CM	1996. 05. 21.
나우르	12			200		1996. 01. 23.
네팔	-	-	-	-	-	1998. 11. 02.
뉴질랜드	12	24	200		200	1996. 07. 09.
나이우에	12		200			
오만	12	24	200			1989. 08. 17.
파키스탄	12	24	200		200/CM	1997. 02. 26.
팔라우	3			200		1996. 09. 30.
파푸아뉴기니아	12			200	200	1997. 01. 14.
필리핀			200		Exp	1984. 05. 08.
카타르	12	24	중간선			2002. 12. 09.
대한민국	12	24	200			1996. 01. 29.
사모아	12		200			1995. 08. 14.
사우디아라비아	12	18				1996. 04. 24.
싱가포르	3					1994. 11. 17.
솔로몬제도	12		200		200	1997. 06. 23.
스리랑카	12	24	200		200/CM	1994. 07. 09.
시리아아랍공화국	35	41			200	
타지키스탄	-	-	-	-	-	
태국	12	24	200		200/Exp	
통가	12		200		200	1995. 08. 02.
터키	6/12		200			
트루크메니스탄	-	-	-	-	-	
투발루	12	24	200			2002. 12. 09.
아랍에미레이트	12	24	200		200	
우즈베키스탄	-	-	-	-	-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료 봉 (nm)	협약비준
바누아투	12	24	200		200	1999. 08. 10.
베트남	12	24	200		200/CM	1994. 07. 25.
예멘	12	24	200		200	1987. 07. 21.
나우르	12			200		1996. 01. 23.
네팔	-	-	-	-	-	1998. 11. 02.
뉴질랜드	12	24	200		200	1996. 07. 09.
나이우에	12		200			
오만	12	24	200			1989. 08. 17.
파키스탄	12	24	200		200/CM	1997. 02. 26.
팔라우	3			200		1996. 09. 30.
파푸아뉴기니아	12			200	200	1997. 01. 14.
필리핀			200		Exp	1984. 05. 08.
카타르	12	24	중간선			2002. 12. 09.
대한민국	12	24	200			1996. 01. 29.
사모아	12		200			1995. 08. 14.
사우디아라비아	12	18				1996. 04. 24.
싱가포르	3					1994. 11. 17.
솔로몬제도	12		200		200	1997. 06. 23.
스리랑카	12	24	200		200/CM	1994. 07. 09.
시리아아랍공화국	35	41			200	
타지키스탄	-	-	-	-	-	
태국	12	24	200		200/Exp	
통가	12		200		200	1995. 08. 02.
터키	6/12		200			
트루크메니스탄	-	-	-	-	-	
투발루	12	24	200			2002. 12. 09.
아랍에미레이트	12	24	200		200	
우즈베키스탄	-	-	-	-	-	
바누아투	12	24	200		200	1999. 08. 10.
베트남	12	24	200		200/CM	1994. 07. 25.
예멘	12	24	200		200	1987. 07. 21.

2. 아프리카 지역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륙 봉 (nm)	협약비준
알제리아	12			32/52		1996. 06. 11.
앙골라	20			200		1990. 12. 05.
베닌	200					1997. 10. 26.
보츠와나	-	-	-	-	-	1990. 05. 02.
부르키나파소	-	-	-	-	-	
브룬디	-	-	-	-	-	
카메룬	50					1986. 11. 19.
케이프베르드	12	24	200		200	1987. 08. 1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	-	
차드	-	-	-	-	-	
코모로스	12		200			1994. 06. 23.
콩고	200					
코테드아이보레	12		200		200	1984. 03. 26.
D.R.콩고	12		협정선			1989. 02. 17.
지부티	12	24	200			1991. 10. 08.
이집트	12	24	경계미정		200/Exp	1983. 08. 26.
기니아(에쿠)	12		200			1997. 07. 21.
에리트리아	12					
에티오피아	-	-	-	-	-	
가봉	12	24	200			1998. 03. 11.
잠비아	12	18		200		1984. 05. 22.
가나	12	24	200		200	1983. 06. 07.
기니아	12		200			1985. 09. 06.
기니아(비사우)	12		200			1986. 08. 25.
케냐	12		200		200/Exp	1989. 03. 02.
레소토	-	-	-	-	-	
라이베리아	200					
자마리아	12					
마다가스카르	12	24	200		200	2001. 08. 22.
말라위	-	-	-	-	-	
말리	-	-	-	-	-	1986. 07. 16.
마우리타니아	12	24	200		200/CM	1996. 07. 17.
마우리티우스	12		200		200/CM	1994. 11. 04.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룩 봉 (nm)	협약비준
모로코	12	24	200			
모잠비크	12		200			1997. 03. 13.
나미비아	12	24	200			1983. 04. 18.
나이지	-	-	-	-	-	
나이지리아	30		200		200/Exp	1986. 08. 14.
튀니시아	12	24				1985. 04. 24.
우간다	-	-	-	-	-	1990. 11. 09.
탄자니아	12		200			1985. 09. 30.
잠비아	-	-	-	-	-	1983. 03. 07.
짐바브웨	-	-	-	-	-	1993. 02. 24.
르완다	-	-	-	-	-	
사오톰	12		200			
세네갈	12	24	200		200/CM	
세이셸	12		200		200/CM	
시라로네	200				200/Exp	
소말리아	200					
남아프리카	12	24	200		200/CM	
수단	12	18			200/Exp	
스와질랜드	-	-	-	-	-	
토고	30		200			

3. 미주 지역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룩 봉 (nm)	협약비준
안티구아·바뷰다	12	24	200		200/CM	1989. 02. 02.
아르헨티나	12	24	200		200/CM	1995. 12. 01.
바하마스	12		200			1983. 07. 29.
바바도스	12		200			1993. 10. 12.
벨리제	3/12		200			1983. 08. 13.
볼리비아	-	-	-	-	-	1995. 04. 25.
브라질	12	24	200		200/CM	1988. 12. 22.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룩 봉 (nm)	협약비준
캐나다	12	24	200		200/CM	2003. 11. 07.
칠레	12	24	200		200/350	1997. 08. 25.
콜롬비아	12		200		200/Exp	
코스타리카	12		200		200/Exp	1992. 09. 21.
큐바	12		200			1984. 08. 15.
도미니카	12	24	200			1991. 10. 24.
도미니카공화국	6	24	200		200/CM	
에콰도르	200				200	
엘살바도르	200					
그레나다	12		200			1991. 04. 25.
과테말라	12		200		200/Exp	1997. 02. 11.
고야나	12			200	200/CM	1993. 11. 16.
하티티	12	24	200		Exp	1996. 07. 31.
혼두라스	12	24	200		200/Exp	1993. 10. 05.
자메이카	12	24	200		200/CM	1983. 03. 21.
멕시코	12	24	200		200/CM	1983. 03. 18.
니카라과	200					
파나마	200					
파라과이	-	-	-	-	-	
페루	200				200	
세인트키츠	12	24		200	200/CM	
세인트루시아	12	24		200	200/CM	
빈센트·그라나다	12	24		200	200	
수리남	12			200		
트리니다드	12	24		200	200/Exp	
우르과이	12			200	200/CM	
미국	12		200		200/Exp	
베네쥬엘라	12	15	200		200/Exp	

4. 유럽 지역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륙 봉 (nm)	협약비준
알바니아	12				200/Exp	2003. 06. 23.
안도라	-	-	-	-	-	
아르메니아	-	-	-	-	-	2002. 12. 09.
오스트리아	-	-	-	-	-	1995. 07. 14.
아저바이잔	-	-	-	-	-	
벨라루스	-	-	-	-	-	
벨지움	12			중간선	합의선	1998. 11. 13.
보스니아						1994. 01. 12.
불가리아	12	24	200			1996. 05. 15.
크로아티아	12				중간선	1995. 04. 05.
체코	-	-	-	-	-	1996. 06. 21.
덴마크	3	4	200		200/Exp	
에스토니아	12		합의선		합의선	
핀란드	12			12	200/Exp	1996. 06. 21.
프랑스	12	24	200		200/Exp	1996. 04.1 1.
조지아						1996. 03. 21.
독일	12		경위도선		200/Exp	1994. 10. 11.
그리스	6-10				200/Exp	1995. 07. 21.
홀리시	-	-	-	-	-	
헝가리	-	-	-	-	-	2002. 02. 06.
아일랜드	12		200		200/CM	1985. 06. 21.
에이레	12			200		1996. 06. 21.
이탈리아	12				200/Exp	1995. 01. 03
라트비아	12					
리첸스타인	-	-	-	-	-	
리투아니아	12					2003. 11. 12.
룩셈부르크	-	-	-	-	-	2000. 10. 05.
말타	12	24		25	200/Exp	1993. 05. 20.
모나코	12					1996. 03. 20.
네델란드	12			200	200/Exp	1996. 06. 28.
노르웨이	4	10	200		200	1996. 06. 24.
폴란드	12		협정선			1998. 11. 13.

국 가 명	영 해 (nm)	접속수역 (nm)	EEZ (nm)	EFZ (nm)	대 륙 봉 (nm)	협약비준
포르투갈	12		200		200/Exp	1997. 11. 03.
몰도바공화국	-	-	-	-	-	
루마니아	12	24	200		200/Exp	1996. 12. 17.
러시아연방	12		200		200/CM	1997. 03. 12.
산마리노	-	-	-	-	-	
슬로바키아	-	-	-	-	-	1996. 05. 08.
슬로베니아						1995. 06. 16.
스페인	12	24	200		200/Exp	1997. 02. 15.
스웨덴	12		중 간 선		200/Exp	1996. 06. 25.
스위스	-	-	-	-	-	
마케도니아	-	-	-	-	-	1994. 08. 19.
우크라이나	12		200			1999. 07. 26.
영국	12			200	200/Exp	1997. 07. 25.
세르비아	12				200/Exp	2001. 03. 12.

주) Exp : 개발 가능 범위까지, CM : 대륙연변부까지의 범위를 의미함.

부록 2 :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유엔해양법당사국회의의 경과

(2004년 6월 현재)

문서번호	연월일	주요내용
SPLOS/111	2004. 0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수정문서를 위원회에 제출. ◦ 운용 지침 수정. ◦ 기금 대하여 정치적 재정적 지원 요구.
SPLOS/94	2003. 0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연안국의 제출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항목을 채택. ◦ 위원회는 권고의 기밀성 유출에 관하여 결정. ◦ 해양법사무국이 위원회에 훈련매뉴얼 제출. ◦ 개도국에 대한 기금을 유엔총회가 지원.
SPLOS/82	2002. 03. 21.	◦ 러시아의 제출문건에 대한 일본의 이의 제기.
SPLOS/81	2002. 03. 20.	◦ 대륙붕한계위원회 선거에 당사국이 추천한 후보자의 이력(후보자 이력서 양식 별첨)
SPLOS/80	2002. 03. 13.	◦ 대륙붕한계위원회 선거에 당사국이 추천한 후보자 명단(명단 별첨)
SPLOS/79	2002. 02. 16.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선거(2002년 3월 11일 후보자 추천 마감)
SPLOS/72	2001. 05. 29.	◦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10년 제출기한의 개시에 대해 결정
SPLOS/67	2001. 05. 10.	◦ 오스트레일리아,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르,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바투아니아의 제출
SPLOS/66	2001. 05. 10.	◦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세이셸 정부의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문서
SPLOS/65	2001. 05. 02.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이 11번째 당사국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문서
SPLOS/64	2001. 05. 01.	◦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II에 대한 논의

문서번호	연월일	주요내용
SPLOS/58	2000. 06. 06.	◦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자발적 기금 설립에 대한 결정
SPLOS/52	2000. 05. 05.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이 10번째 당사국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문서
SPLOS/49	1999. 06. 16.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이 9번째 당사국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문서
SPLOS/39	1999. 05. 21.	◦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당사국회의에 제출한 논점
SPLOS/38	1999. 05. 17.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이 9번째 당사국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문서
SPLOS/28	1998. 05. 15.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이 8번째 당사국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문서
SPLOS/26	1998. 03. 12.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이 8번째 당사국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문서
SPLOS/17/Add.1	1997. 03. 17.	◦ 당사국 회의 결정에 따른 추가후보자 명단
SPLOS/16	1997. 02. 14.	◦ 대륙붕한계위원회 선거에 당사국이 추천한 후보명단
SPLOS/15	1997. 07. 13.	◦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선거
SPLOS/CLCS/INF/1	1996. 06. 10.	◦ 연안국의 동의에 있어서 기능적, 과학적 및 기술적 필요성

자료 : 홈페이지(www.un.org/Depts/los/meeting)

부록 3 :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1조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해양법에 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①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대한민국과 대항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확정한다.

제3조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목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나. 해양과학조사
 -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②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

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등) ①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동조제2호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검색·나포 및 동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5151호,1996.8.8>

이 법은 공포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장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인접한 수역 중에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중화인민공화국 육지영토의 전부가 중국 영해 이원으로 자연 연장되어 대륙변계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구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이며, 만약 영해기선에서 계산하여 대륙변계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를 200해리까지 확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안을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를 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
-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활동과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조사를 위한 기타 활동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연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본 법이 지칭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천연자원에는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을 포함한다.
-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붕의 탐사와 대륙붕의 천연자원개발을 위하여 대륙붕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붕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 해양과학연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목적을 위하여 대륙붕 상에서 시추하는 것을 허가 및 관리하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본 법이 지칭하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는 해저와 그 하층토의 광

물과 기타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 즉 수확 가능 단계에서 해저의 표면 또는 해저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해저 또는 그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을 포함한다.

제5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국가간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기관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이 과도한 개발로 인한 위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보호와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권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어족, 고도회유성 어종, 해양포유동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역 내에서 대부분의 생존주기를 보내는 강하산유어종에 대하여 보호와 관리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천을 모천으로 하는 역하성 어족에 대하여 주요 권익을 향유한다.

제7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활동을 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상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것에는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법률과 법규분야의 관할권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권기관은 항해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권리가 있고, 동 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저전선과 도관을 부설할 자유와 상기한 자유와 관련 있는 기타 해양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해저전선과 도관의 선로를 부설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호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승선·조사·나포 및 사법절차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의법조치할 권리를 가지며,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향유하는 권리 중에서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관계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행사한다.
- 제14조 본 법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향유하는 역사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본 법에 근거하여 관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6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5 :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제1조 (배타적경제수역) ①우리나라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역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②전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간단히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기선(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소화52년 법률 제30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200해리인 선 (그 선이 우리나라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우리나라의 해안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외국의 해안에 걸리는 그 외국의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할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 그리고 그 해저 및 그 아래로 한다.

제2조 (대륙붕)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대륙붕(이하 간단히 ‘대륙붕’이라 한다)은 다음 열거하는 해역의 하저 및 그 아래로 한다.

1.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합의된 중간선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 및 이것과 접속하여 그어지는 정령으로 규정하는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

2. 전호의 해석(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외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인 선에 의해 그 한계가 확정되는 부분에 의한다)의 외측에 접하는 해석이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정령으로 규정하는 것.

제3조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 ①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령(벌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어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인공섬, 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 건설, 운용 및 이용,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해양의 과학적 조사.
2.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탐사 및 개발활동(전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3. 대륙붕의 굴삭(제1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4. 전3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연결된 수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집행(당해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들 수역으로부터 행해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에 관계되는 직무집행을 포함한다)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

②전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항 제1호의 인공섬,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해서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법령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이 적용될 수역이 우리나라의 영역 이외인 저 기타 당해 수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으로 당해 법령의 적용관계의 정리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정을 규정할 수 있다.

제4조 (조약의 효력) 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이 법률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일본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정율법의 일부개정) 관세정율법 (명치43년 법률 제5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하는 (기く)]를 [기하는 (기づく)로] 개정, [공해] 밑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역 및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역]을 덧붙인다.

제3조 (관세법의 일부개정) ①관세법 (소화29년 법률 제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 一 항(項)을 덧붙인다.

②전항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소화 45년 법률 제13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삭제

제5조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의 일부개정) 유탁손해보장법(소화50년 법률 제9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의 배타적경제수역 등 배타적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평성8년 법률 제74호)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말한다. 제31조에 있어서도 같다) 및 1992년 책임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의 1992년 책임조약 제2조(a)(ii)에 규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중 [200해리 수역 등]을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개정한다. 제31조중 [200해리 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개정한다.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2004年 12月 27日 印刷

2004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李 廷 旭

發行人

發行處 韓 國 海 洋 水 產 開 發 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수암빌딩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영진인쇄사 ☎(02)734-371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